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4. 4.



국무조정실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2024.4.)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044-200-205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412호

목 차

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 국무조정실 일반현황 1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4

II. 세부 추진계획

- 1. 전략목표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7
- 2. 전략목표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26
- 3. 전략목표 III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41
- 4. 전략목표 IV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 조정·지원] 59
- 5. 전략목표 V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분야 정책 조정·지원] .. 76
- 6. 전략목표 VI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99

III. 협업과제

- 1. 금년도 협업과제 130

IV. 환류 등 관련계획

- 1. 이행상황 점검계획 142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45

【붙임】

- 1. 성과지표 현황 146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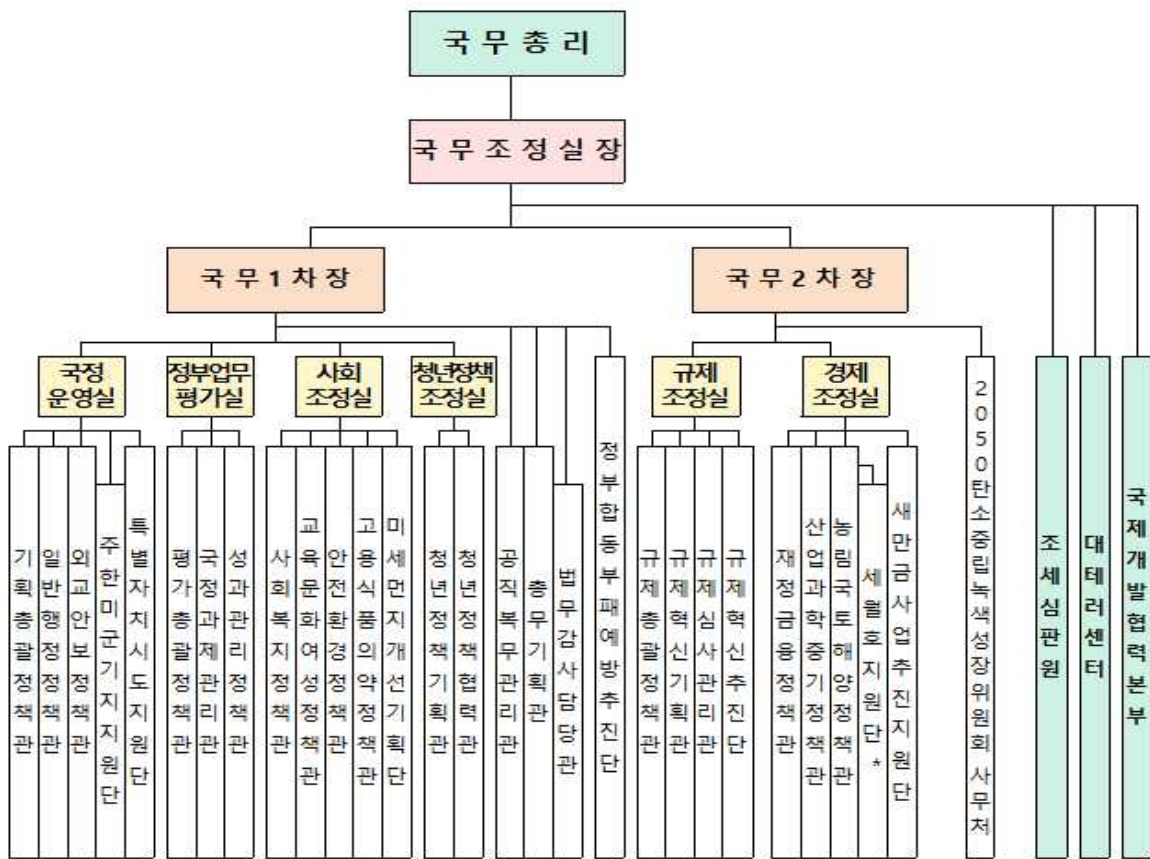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무조정실 일반현황

(1) 조 직

○ 2차장 6실 20국 1담당관 8기획단

- 소속기관 : 1원 1센터 1본부(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



* 정식명칭: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2) 인 원

(‘24.3월 기준, 단위: 명)

구분 \ 직급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타
정원	495	3	41	19	66	50	211	94	11
현원	480.875	3	40	18	64	50	199	96.875	10
파견자	340	-	7	2	24	20	142	26	119
소계	820.875	3	47	20	88	70	341	122.875	129**

* 직제상 현원, **기타(130명): 전문위원, 경찰, 소방, 군인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습 등(35명) 제외

(3)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6,763	7,801	8,307	8,410	9,153
(전년대비증가율, %)	3.3	15.3	6.5	1.2	8.8
○ 총계	6,766	7,803	8,310	8,412	9,155
(전년대비증가율, %)	3.3	15.3	6.5	1.2	8.8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579	619	662	709	758
(전년대비증가율, %)	1.1	6.9	6.9	7.1	6.9
○ 기본경비	161	166	171	176	181
(전년대비증가율, %)	23.0	3.1	3.0	2.9	2.8
○ 주요사업비	6,024	7,017	7,474	7,525	8,213
(전년대비증가율, %)	3.1	16.5	6.5	0.7	9.1
□ 예산					
○ (총)지출	6,763	7,801	8,307	8,410	9,153
(전년대비증가율, %)	3.3	15.3	6.5	1.2	8.8
○ 총계	6,766	7,803	8,310	8,412	9,155
(전년대비증가율, %)	3.3	15.3	6.5	1.2	8.8
【 일반회계 】					
○ (총)지출	6,644	7,650	8,155	8,251	8,981
(전년대비증가율, %)	3.5	15.1	6.6	1.2	8.8
○ 총계	6,647	7,652	8,157	8,253	8,983
(전년대비증가율, %)	3.5	15.1	6.6	1.2	8.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총)지출	119	151	152	159	172
(전년대비증가율, %)	△2.6	26.9	0.7	4.6	8.2
○ 총계	119	151	152	159	172
(전년대비증가율, %)	△2.6	26.9	0.7	4.6	8.2
【 환경개선특별회계 】					
○ (총)지출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총계	-	-	-	-	-
(전년대비증가율,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성과관리 전략계획과의 연계

- 「성과관리 전략계획('22~'26)」에 제시된 임무·비전·전략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등을 설정

[성과관리 전략계획('22 ~ '26)]

- (임무) 선제적 정책조정을 통한 국정·안정적 관리
- (비전) 국정을 선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무조정실
- (전략목표) ①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 ②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 ③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 ④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 ⑤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 ⑥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 국무조정실 핵심 업무 위주 관리과제 선정

- 국정·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 국정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갈등 관리
 - 경제·사회 분야 정책협의·조정
- 국무조정실 고유의 기능
 -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에 대한 점검·관리
 - 덩어리·고질적 규제의 혁파
 - 탄소중립, ODA, 청년정책 등 미래 변화에 대비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선제적 정책조정을 통한 국정운영의 안정적 관리					
비전	국정을 선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무조정실					
전략 목표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III.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IV.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V. 국민의 생명·안전·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VI.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2.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1. 핵심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개선 4. 중복·복합 규제(덩어리 규제)의 종합적 개선	1. 기획재정·금융 ·공정거래 분야 조정· 지원 강화 2. 산업·통상· 에너지·과학 기술·지식재산 ·중소벤처 분야 조정· 지원 강화 3. 농림·국토· 해양 분야의 조정·지원 강화 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1. 보건·복지 분야 조정· 지원 강화 2. 교육·문화· 체육·관광·여성 분야 조정· 지원 강화 3. 안전·환경 분야 조정· 지원 강화 4. 고용노동· 식품의약 분야 조정· 지원 강화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지원 2. 체계·통합· 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지원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5	22	22	29	70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성과목표 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①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국정 12-1~4	
	②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국정 4-11 등	
<성과목표 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① 외교·안보 현안 관리 및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국정 98-1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갈등관리	국정 102	
<성과목표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① 국민생활 밀접 및 국가재정손실 부정부패 예방	국정5-7	
[전략목표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성과목표 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① 국정과제 관리·점검	국정 12	
<성과목표 2>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①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국정 12	
<성과목표 3>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①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		
[전략목표 III]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목표 1> 핵심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①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국정 16-1·5	
<성과목표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①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국정 16-3~4	
<성과목표 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개선			
	①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품질 제고	국정 16-6	
<성과목표 4> 중복·복합규제(덩어리 규제)의 종합적 개선			
	①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국정 16-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Ⅳ]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성과목표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조정·지원 강화		
	① 재정·금융 정책 조정·지원 강화	국정 5·8·9 등
<성과목표 2>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조정·지원 강화		
	①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등 산업경쟁력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국정 3·11·33 등
<성과목표 3> 농림·국토·해양 분야의 조정·지원 강화		
	①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조정·지원 강화	국정 7·10·72 등
<성과목표 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국정 13-4
	②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심판결정의 신뢰 제고	국정 13-4
[전략목표 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성과목표 1> 보건·복지 분야 조정·지원 강화		
	① 보건·복지정책 추진 지원 및 조정 강화	국정 42~47 등
<성과목표 2>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조정·지원 강화		
	①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강화	국정 58·81 등
<성과목표 3> 안전·환경 분야 조정·지원 강화		
	①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 강화	국정 65·87 등
	②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정책 조정·지원 강화	국정 88
<성과목표 4>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조정·지원 강화		
	①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추진 지원 및 현안관리	국정 51·68 등
[전략목표 Ⅵ]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성과목표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지원		
	①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국정 92-1, 민생
	②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국정 92-2, 민생
<성과목표 2>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① ODA 통합 정책·전략 마련 및 사업효과성 제고	국정 99-4
	② ODA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국정 99-4
<성과목표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① 범부처 탄소중립 정책 수립·조정 및 국민소통 지원	국정 86-1
<성과목표 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지원		
	①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원	국정 111
	②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지원	국정 38

전략목표 |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기 본 방 향

-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노력
 - 특히,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총력
- ◇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없애고 효율성·생산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정부’ 구현
 - 민생 문제해결 중심의 국정협의체 운영, 범정부적 홍보전략 수립, 선제적 리스크 및 갈등 관리 등 국조실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국정운영 도모
-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행정분야 국정과제 성과창출 지원
-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위한 외교안보 국정과제 성과 창출 지원
-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우
- ◇ 국민이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 차단 노력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5	14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대응실적
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갈등완화율
	①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률(%) ■ 국정상황점검 실적(회) ■ 갈등관리 점검회의 실적(회)	
	②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 일반행정 현안 점검 및 정책 조정 실적 ■ 국무·차관회의 상정 안건수	
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① 외교·안보 현안 관리 및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 외교·안보 현안 관리 ■ 외교·안보 관련 긴급 사안 대응 ■ 국무총리 현장 행보 및 외교활동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사업 정책지원 강화 및 갈등관리	■ 정책협의회 및 현안점검 회의 처리안건 건수 ■ 한미간 쟁점현안 발굴 및 구체화 ■ 현장방문 및 소통 건수 ■ 반환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① 국민생활 밀접 및 국가재정손실 부정부패 예방	■ 점검과제 건수(건) ■ 제도개선 과제 이행률(%)	

(1) 주요내용

- ☐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체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조정을 거쳐 정책방향 결정
- ☐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정책과 홍보의 전략적 연계 지원
 - 특히 일반행정 및 외교안보 분야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 도모
- ☐ 주요 갈등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 갈등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강화
- ☐ 부정부패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실적 (회)	신규	215	237	236	226	249	'23년 주요 국정협의체 운영횟수 236회를 감안 매년 약 2% 상승을 목표로 '28년은 국정협의체 운영 249회를 목표로 설정(회)	주례회동,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 국정협의체 운영 횟수	회의 개최계획, 보도자료, 안건 등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선제적·적극적 현안 조정·관리로 국정운영 성과 제고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국무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체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와 협의·조율을 거쳐 정책방향 결정
- 리스크 과제의 선제적 발굴과 현안 상시점검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 적기 대응·관리로 정책 위험요인 조기 차단
- 갈등과제 집중관리,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갈등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질적 갈등 해결 성과 제고
- 공직사회 관리, 법질서 및 민생안전 등 일반행정 분야 주요 정책현안 적기 대응 및 관련 국정과제 성과창출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갈등완화율(%)	71	65	47	61	과거 3년간 평균 갈등완화율이 61%임을 감안, 평균 수준인 61%를 24년 목표치로 선정 * '21년(71%), '22년(65%), '23년(47%)	갈등현안 과제수대비 갈등 완화·진전 과제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안건 기준)	회의 개최계획, 안건 및 결과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 대내외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사회 복잡성 증가 등으로 잠재되어있던 다양한 이슈가 표면화

⇒ 이해관계자와 부처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 등으로 이슈 선제적 발굴·관리, 적극적 협의·조정 노력

□ 갈등관리 인식 변화

- 갈등의 속성상 긴 시간이 소요되고,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어 완벽한 갈등해소는 어려우나,

- 추진과정에서 설득·소통 방법에 따라 갈등의 크기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先추진 後설득'의 관행 인식 변화 필요

⇒ 갈등관리 컨설팅,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갈등 최소화 도모, 교착·장기화된 갈등은 집중관리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

□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과 정책조정·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등 정책분야에 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정부조직법 20조①)
 - 특히,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 통할·감독권(헌법 86조)을 보좌하기 위한 관리과제를 설정
 - 주요 공공정책 및 국책사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현안 점검 및 해결 강화
 - 총리가 국정현안을 적기에 파악·조율·지휘하여 안정적 국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회의 등 주요 국정협의체를 통한 적시성 있는 정책 협의·조정으로 국정성과 제고 뒷받침
 - 특히 다 부처 관련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부처 간 이견은 적극적 조정 집중 추진
 - 당면현안 대응을 위해 부처 역할 조율 및 종합대책 마련

○ 정책 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대응

- 국정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부처-국조실 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 국회·여론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전략적 현안관리 추진
- 정책 리스크 내재 과제 및 부처간 협업 필요 사안 선제적 발굴
- 국정홍보점검회의(全 차관 참석)를 통해 △정책 여론 동향 및 부처 대응상황 점검 △주요 정책 일정 등 조율 △공동 대응 이슈 발굴

○ 체계적 갈등관리

- 반기별 집중관리 과제 선정 및 주기적 점검 등 갈등관리 회의체 (갈등관리정책협의회 등) 운영을 활성화하여 체계적 관리 강화
- 갈등관리 컨설팅, 갈등관리 교육을 통한 부처·지자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풀을 활용한 민간 전문가의 갈등 조정·중재 활성화
- 미래갈등 이슈 지속 발굴, 대응방안 수립 등 선제적 대비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 대응	'24.1~3월	
	국조실장 주재 국정상황점검회의 등 개최 운영		
	리스크 대응회의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개최		
2/4분기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 대응	'24.4~6월	
	국조실장 주재 국정상황점검회의 등 개최 운영		
	리스크 대응회의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개최		
3/4분기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 대응	'24.7~9월	
	국조실장 주재 국정상황점검회의 등 개최 운영		
	리스크 대응회의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개최		
4/4분기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 대응	'24.10~12월	
	국조실장 주재 국정상황점검회의 등 개최 운영		
	리스크 대응회의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개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갈등관리 연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지역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간담회	1, 7월
현장방문 및 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지역 개최	계기시

□ 기대효과

- 주요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갈등관리 등을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정성과 창출 △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공공기관 갈등관리(Ⅱ-1-일반재정②)			
①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7032)	일반회계	3.80	3.50
■ 공공기관 갈등관리(301)	일반회계	3.80	3.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률(%)	98 /92	98 /95	97.6 /95	95	후속조치의 중요성과 외부요인 의존성(법률 국회통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95%로 설정	이행률(%) = (완료건 + 정상추진건) /전체	후속조치 계획, 이행실적 등
국정홍보점검회의 등 국정상황점검 실적(회)	-	128 /80	190 /132	88	국정상황 점검·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주 2회 이상을 목표로 하되, 휴일 및 불가피한 일정(국회 순방 등), 리스크 대응회의 실적 제외 등 고려, 주 2회(93)의 95%인 88회를 목표로 설정	국정홍보점검회의, 상황점검회의,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등 개최 실적	회의 개최계획, 개최실적 및 결과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실적(회)	17 /15	17 /17	17 /17	35	최근 3년간 평균 실적(17), 리스크 대응회의 실적 포함(회)개설 이후 연평균 18) 등 고려, 35회를 목표치로 설정	리스크 대응회의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실적	회의 계획 및 결과 등

〈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정부 3년차,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 △민생범죄 근절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 가할 시점
-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국무·차관회의 운영 등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 현안 관리 및 조정
 -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자치 분권 △출입국 관리 △공명선거 행정지원 등 주요 현안 적기 대응 및 선제적 조정
- 국무·차관회의 운영
 - 국정 심의기구로서 국무·차관회의의 운영 내실화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일반행정 분야 주요 현안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수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매주)	매주	
2/4분기	일반행정 분야 주요 현안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수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매주)	매주	
3/4분기	일반행정 분야 주요 현안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수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매주)	매주	
4/4분기	일반행정 분야 주요 현안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수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매주)	매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행정서비스 대상자인 일반국민 전체 (공무원 포함)

☐ 기대효과

- 일반행정 분야 부처간 엇박자 감소 및 범정부 One-voice 대응
- 일반행정 분야 갈등 예방 및 조기 해결
- 내각중심 국정운영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일반행정 현안 점검 및 정책 조정 실적	23/ 14	20/ 20	31/ 25	32	전년도 목표치(25건) 및 실적(31건) 보다 적극 상향 조정(28%↑)하여 목표치 설정(분기별 8건 이상)	정책현안 조정· 지원·점검 건수	조정 결과 제출 (회의 결과 등)
국무·차관회의 상정 안건수	신 규	신 규	신 규	2,000	최근 3년간 평균 안건수(1,993건) 보다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 설정 (분기별 500건 이상)	국무·차관회의 상정 안건수	국무·차관회의 계획 제출

※ (참고)

- 국무·차관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국정 현안,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부처간 협의·조율을 거쳐 최종 정책으로 확정하는 결과물로, 현안 관리 및 조정·지원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
- 국무·차관회의 상정 안건수 ('21) 2,147건, ('22) 1,770건, ('23) 2,061건

(1) 주요 내용

□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점검·지원

- 주요 정책현안 및 주요 상황 점검·관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점검·조정

※ NSC 정례회의 및 긴급회의 운영 지원

-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실질적 성과 도출 지원

-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

- 국내에 대한 北 도발(핵, 미사일 등) 시, 관련기관(합참 등)과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대응, 동향 등 보고)

- 해외에서의 전쟁, 재난 등 발생 시, 우리 국민·기업 피해 보고 및 지원상황 점검·관리(국무총리 긴급지시 배포)

□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 ▲해외 순방 ▲외빈 회담·접견 ▲(주요 계기시) 서한 발송 등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 △인태전략 추진 등 외교성과 창출에 기여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고, 동두천·의정부 등 국가안보 희생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현장 방문·소통 등을 통해 갈등 사전 관리 강화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점)	4.41	4.53	4.53	4.49	외교안보분야 정책현안 해결 및 안정적 상황관리 등을 통한 정책만족도 제고 * 최근 3개년 실적치의 평균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7점 척도)	국민, 현장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매년 12월경)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갈등(러-우戰, 중동, 양안 등)
△미국 대선 △미·중 갈등 심화 등 각종 외교 현안 발생 예상

⇒ 국무총리께 △해외 동향 △우리 정부 입장 △대응 라인 등을
적시에 보고하여, 정부의 대응력 강화

- 한반도를 둘러싼 ① 남·북간 강대강 대결 ② 한미일 vs 북중러간
대결 구도 고착에 따른 긴장 국면 지속

⇒ 제7차 핵실험 또는 우발적 충돌 등 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체계 및 내부 대응요령 등 준비

※ 제6차 핵실험 : 2017.9.3., 함북 길주군 풍계리(약 50kt급 폭발력, 추정)

- 未반환기지 조속 반환 요구, 환경오염 책임 이슈, 공여구역
주변 지역 활성화 요구 등 기지반환 관련 갈등 요인 상존

○ 범정부 TF를 통해 조속 반환·환경관리 강화에 중점 두고 추진

○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갈등 요인
사전 예방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외교·안보 현안 관리 및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

□ 추진배경

- 외교·안보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만큼,
 - ▲긴급상황(北 위협, 재외국민 안전 등)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와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
- 또한, 국무총리는 유사시 국군통수권을 대행하고 대통령과 함께 정상외교를 수행하므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충실히 보좌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긴급 안보 사안 ▲국외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 긴급 지시, NSC 논의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
- 군 사격장 갈등 및 군 공항 이전 등 민·군 갈등 관련 현안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조정을 통해 안보 체계 확립
- 국무총리 해외순방 및 외빈 접견, 서한 외교 등의 활동을 충실하게 보좌, 국익 극대화에 기여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관리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1~3월	외교·안보 분야 특성상 사전에 계획 수립이 곤란한 특수성 감안
2/4분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관리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4~6월	
3/4분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관리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7~9월	
4/4분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관리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안보 협의체	NSC, 중앙통합방위회의 등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 논의	매주
현장 방문	주요 일정 계기 시 기념식, 해외 현지 등 방문	수시

☐ 기대효과

-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리스크 관리 등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부로 자리매김에 기여
- 국무총리 외교활동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주요 협력 대상국들과의 우호 관계 및 실질 협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외교·안보 분야 현안 관리(건)	신 규	15	18	19	'21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에 따라 신설한 지표로, - 본 지표의 최근 2개년도 실적치 평균(16.5건)의 약 20% 수준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관계부처회의 횟수 + 정책조정 건수	회의 개요 및 결과, 보도자료 등
외교·안보 관련 긴급 사안 대응(건)	신 규	신 규	신 규	12	우리 국 소관 사안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중요한 만큼, - 긴급상황의 발생횟수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통상 1개월당 1건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설정	1개의 사안에 대해 수차례 보고하더라도 1건으로 카운팅	사안별 상황보고서
국무총리 현장 행보 및 외교활동(건)	신 규	신 규	신 규	52	중요 정치 일정(총선) 및 개각 가능성에 따라 쉽지 않겠지만, - 1주당 최소 1회는 국무총리의 현장 행보 또는 외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목표치 설정	보훈 관련 행사 등 현장 + 순방, 접견, 서한 등 외교활동	계획서, 보도자료 등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갈등관리 〉

□ 추진배경

- 범정부 협의체(정책협의회, 범정부 TF 등) 등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관련 현안의 신속한 협의·조정 및 갈등관리
- ※ 근거 : 「주한미군기지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견 등 협의·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정책협의회, 범정부TF 등) 운영
- 주한미군 평택지역 이전에 따라 동두천시 등 국가안보 희생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지원 강화
- 이전·활용 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관리 강화 및 정책 수요자 중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장 소통 및 제도개선 적극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지반환, 대미협의, 지역 현안 관련 정책협의회 및 현안 점검회의 개최	1~3월	
	동두천, 평택, 의정부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관계기관 협의, 현장 방문 등)	1~3월	
	현장 방문 및 소통(지역 방문, 국회의원.지자체장 면담 등)	1~3월	
	반환 구역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협의	1~3월	
2/4분기	기지반환, 대미협의, 지역 현안 관련 정책협의회 및 현안 점검회의 개최	4~6월	
	동두천, 평택, 의정부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관계기관 협의, 현장 방문 등)	4~6월	
	현장 방문 및 소통(지역 방문, 국회의원.지자체장 면담 등)	4~6월	
	반환 구역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협의	4~6월	
3/4분기	기지반환, 대미협의, 지역 현안 관련 정책협의회 및 현안 점검회의 개최	7~9월	
	동두천, 평택, 의정부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관계기관 협의, 현장 방문 등)	7~9월	
	현장 방문 및 소통(지역 방문, 국회의원.지자체장 면담 등)	7~9월	
	반환 구역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협의	7~9월	
4/4분기	기지반환, 대미협의, 지역 현안 관련 정책협의회 및 현안 점검회의 개최	10~12월	
	동두천, 평택, 의정부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관계기관 협의, 현장 방문 등)	10~12월	
	현장 방문 및 소통(지역 방문, 국회의원.지자체장 면담 등)	10~12월	
	반환구역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협의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주한미군, 용산구·평택시·동두천시 등 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지역 지자체 주민과 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사업 시행자(LH 등), 환경 관련 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사업 추진 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요 현안 및 갈등을 적기에 조정·관리하여 사업 정상 추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1.2	1.0
■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304)	일반회계	1.2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정책협의회 및 현안점검회의 처리안건 건수(건)	40	51	71	39	미군기지(용산 잔여분 포함) 이전 관련 주요 정책조정 현안 중 일부 완료(당초 10개 → 현재 7개)됨에 따라 목표치 조정 ※ '23년 10개현안 : 56건 → '24년 7개현안 : 39건	정책협의회 및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처리한 안건수	정책협의회 및 현안점검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한미간 쟁점현안 발굴 및 구체화(건)	-	2	2	2	한미간 발생 가능한 갈등현안에 대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노력(주요 정책 조정 현안은 감소되었으나 현행유지)	갈등현안 조정을 위한 한미협의 및 정책조정 횟수	갈등현안 조정보고서 등 (갈등발생 前 노력으로 성과보다는 예방에 집중)
현장 방문 및 소통 건수(건)	21	24	25	24	정책 이해관계자간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평시 소통 확대(주요 정책조정 현안은 감소되었으나 현행유지)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간담회 개최 횟수	현장방문 결과보고 의견수렴 이행실적 등
반환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건)		신규	7	4	반환 공여 및 주변 지역 등의 사업여건 조성,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주요 정책조정 현안은 감소되었으나 현행유지)	부처·국회 협의 완료 건수	제도개선 추진실적 결과 보고 등

* 목표치 산출 변동 사유 : 그간 5개지역 10개 주요 현안에 대해 세부 조정(정책지원, 갈등관리 등)을 실시하여, '23년 말까지 3개의 현안을 조정·협의함. 이에 따라 '24년부터는 7개 주요 현안에 대한 세부 조정 계획을 기준으로 각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수정 산출함

(1) 주요 내용

□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 사전예방에 주력

- 국책사업·보조금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부패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부터 점검·개선

□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 점검대상 선정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합동조사,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안 마련·발표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 확보

- 점검결과에 대한 관계부처의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이행 관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신 규	63	63	63	최근 3개년도 달성 추이를 고려, 63점으로 설정 * ('21)62, ('22)63, ('23)63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기업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측정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패예방 활동 지속 필요

-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예방 활동 및 국가재정 누수 요인 지속 모니터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생활 밀접 및 국가재정손실 부정부패 예방 >

□ 추진배경 (목적)

- 대책사업·보조금 사업 등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부패 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부패예방 추진

* 근거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형 대책사업 및 국가재정 투입 분야 점검·제도개선 추진
 - 1조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책사업 등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제도개선
 - 특히,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선제적 점검으로 예산낭비 소지 제거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고질적 부정부패 소지가 있거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조금·지원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제도개선
- 국민생활 밀접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부처 사업 또는 감시 소홀 등으로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사업 점검·제도개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점 점검대상 과제 선정	'24.1월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팀 운용,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24.2월	
	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마련, 관계부처 이첩	'24.3월	
2/4분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팀 운용,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24.4~6월	
	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마련, 관계부처 이첩		
3/4분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팀 운용,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24.7~9월	
	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마련, 관계부처 이첩		
4/4분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팀 운용,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24.10~12월	
	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마련, 관계부처 이첩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과제별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개선방안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1월
현장방문	점검과제별 이해관계자 현장의견 청취	3월, 6월
간담회	점검과제별 유관기관 간담회	3월, 6월
회의	점검과제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9월, 12월

☐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업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점검과제 건수 (건)	9/9	8/9	5/8	8	'21~'23년 실적 평균치(7.3건)보다 상향하여 목표 설정	연간 점검과제 건수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 점검결과 보고서 등
제도개선 과제 이행률 (%)	84.5 /73	77.3 /80	85.8 /76	83	'21~'23년 실적 평균치(82.5%)를 고려, 83%로 목표 상향 설정	점검결과 발표 과제 중 연내 완료기로 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률	후속조치 이행현황 점검결과

기 본 방 향

◇ 120대 국정과제 종합 관리·점검

-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등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 상시 관리
- 종합점검(분기별), 현장점검(수시)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등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소
- 국정과제 추진성과는 정리해 공개하고 과제별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만족도 낮은 과제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총괄·지원하여 정부 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 제고 도모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제시 △제도 운영실태 점검·보완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충실하게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

- 출연연구기관의 융·복합 연구 및 현안대응 기능 강화를 통한 국정운영 기여도 제고
- 기관운영 실태 점검 내실화를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3	6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국정과제 계획 대비 정상추진율
	① 국정과제 관리·점검	■ 국정과제(실천과제) 세부이행계획 정상추진율
	2.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절성
	①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실적 ■ 성과관리 자체평가 역량 지원 제도 만족도
	3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정부 및 산·학·연 고객만족도
	①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	■ 융·복합 연구 성과 ■ 긴급·수시 현안 발굴 및 대응 ■ 연구기관 운영실태 등 점검

(1) 주요내용

□ 국정과제 등 종합점검 관리

-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관리하고,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등 장애요인을 발굴·해소하여 본격적인 성과 창출 도모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 정부출연연구기관 신뢰성 제고

- 출연연구기관의 미션과 목적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도 제고 및 현안대응 기능 강화 등 국정운영 기여도 제고

☞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체감 성과창출 독려 및 책임성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4.64	4.61	4.66	4.48	4.65	4.60	과거 3년간 평균이 4.59점임을 감안, 평균 이상의 수치인 4.60을 목표치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7점 척도)	일반국민 정책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매년 12월경)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 정부 2년차를 맞아 3대 개혁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본격적인 국정성과를 창출을 위해 정부 역량 집중 필요
- 경제·사회여건 및 입법지연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정과제 추진 지연 가능
- 부처에서 개별부서 사업단위 수준으로 성과관리를 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 제시에 애로

□ 갈등관리계획

- 부처간 이견 등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 개최(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 등)를 통한 조정 및 논의로 해소
- 국정과제 관련 갈등 발생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정과제 조정·보완, 수시 현안분석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국정 추진전략 수립
- 성과관리의 경우 전문가 참여를 통해 미흡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국정과제 이행상황 관리 및 점검

- 국정과제 실천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1~2월)
-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행상황 상시 관리(연중)
-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등 장애요인을 발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해소(연중)
- 12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한 연도별 실적자료집 및 핵심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한 성과홍보집 발간(5월)
- 국정과제 만족도조사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을 도모하여 국정 성과 제고(연 2회)
-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연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정과제(실천과제) 세부이행계획 정상추진율(%)	90.7	84.3	89.0	90.0	■ '21년의 실적은 전 정부 4~5년차 100대 국정과제 실적으로, 이를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목표치 산출 시 적용 곤란 ■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추진율 평균은 86.7이나,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 목표 설정을 위해 3.3%p 증가한 수치인 90.0%로 설정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대비 연말 기준 정상추진율(=정상 추진과제수/전체 실천과제 수)	국정과제 4/4분기 점검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갈등요인

- (환경변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지속, 전쟁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 발생 우려
- (이견발생)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이익집단 간 갈등 발생 시 과제 추진 지연 등 장애 발생 가능
- (입법지연) 22대 총선 및 원구성 등 국회 일정, 사안별 與·野 이견 등에 따라 입법 추진 지연 가능

□ 갈등관리 계획

- (환경변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정과제 조정·보완 등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전략 수립
- (부처간 이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 (이해관계자 이견)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한 소통·홍보방안 점검, 소관 부처의 노력 독려
- (입법지연)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입법사항 중점 관리,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당·정간 협조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국정과제 관리·점검 >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예상 리스크 사전 발굴·대응, 장애요인 해소 등 차질없는 이행 도모
- 국정과제 성과를 정리·홍보하고 만족도조사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 실제 정책 개선에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실천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1~2월)
-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행상황 상시 관리(연중)
-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등 장애요인을 발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해소(연중)
- 12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한 연도별 실적자료집 및 핵심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한 성과홍보집 발간(5월)
- 국정과제 만족도조사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을 도모하여 국정 성과 제고(연 2회)
-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연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4/4분기('23년 12월말 기준) 국정과제 추진실적 종합점검	'24.1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별 '24년도 이행계획 수립	'24.2월	
	'24년도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구축	'24.2월	
2/4분기	1/4분기(3월말 기준) 국정과제 추진실적 종합점검	'24.4월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24.5월	
3/4분기	2/4분기(6월말 기준) 국정과제 추진실적 종합점검	'24.7월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24.7월	
4/4분기	3/4분기(9월말 기준) 국정과제 추진실적 종합점검	'24.10월	
	하반기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24.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연 3회(1·2·3분기) 국정과제 현장점검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1분기 국정과제 현장점검	3월
현장방문	2분기 국정과제 현장점검	7월
현장방문	3분기 국정과제 현장점검	10월

☐ 기대효과

-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 삶의 변화와 개선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Ⅱ-1-일반재정①)			
①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7031)	일반회계	1.77	1.77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301)	일반회계	1.77	1.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정과제(실천과제) 세부이행계획 정상추진율(%)	90.7	84.3	89.0	90.0	■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확인 가능한 최근 6년간('18~'23) 수치 중 최고치인 '21년 90.7%에 근접하게 목표치 설정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대비 연말 기준 정상추진율(=정상 추진과제수/전체 실천과제 수)	국정과제 4/4분기 점검 결과

(1) 주요 내용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 전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 총괄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행계획 검토·개선 의견 제시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성과관리 제도 운영의 적절성	신규	신규	신규	70%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긍정적 인식도 70% 이상(상위30%) *자체평가 점검, 상위30% 부서 우수등급 부여	성과관리 제도 운영 인식도 조사	전부처 자체평가 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설문조사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갈등요인

- 기관장의 관심도, 평가결과 환류 등 성과제고 노력이 높을수록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운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년 대비 평가등급 변동기관 수가 크게 줄고, 우수·미흡 기관이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과개선 동력 지속 확산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미흡기관 대상으로 △객관적 원인 진단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등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기관별로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를 집중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및 반기별 점검 등 관리체계 구축·운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

□ 추진배경

-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하여 국민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수립 및 각 기관 공지
- 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 및 반영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성과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미흡기관 컨설팅 제공, 미흡·부진과제 정책개선 등 성과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24.1~3월	
	'24년도 성과관리 운영지침 수립 및 기관통보		
	'23년도 성과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2/4분기	'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결과 정평위 보고	'24.4~6월	
	'23년도 성과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기관 컨설팅		
	성과관리 시행기관 대상 워크숍		
3/4분기	'24년도 성과관리 상반기 점검(전 부처)	'24.7~9월	
	'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지침 부처 안내		
	'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결과 정평위 보고		
4/4분기	'24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47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부 성과관리 역량 제고
- 시행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성과관리 제도개선 검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23년도 성과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기관 컨설팅	4~6월
간담회	성과관리 시행기관 워크숍(우수사례 확산, 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등)	6월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정부 업무 성과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제시, 기관별 성과관리계획 검토·개선의견 제시, 운영실태 점검 등 성과관리 제도 운영 전반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실적	신규	신규	신규	6회	성과관리 자체평가 컨설팅 및 워크숍 6회 이상 실시 *47개 성과관리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2년 연속 미흡 기관 등 6개 대상 컨설팅 실시	성과관리 컨설팅 횟수	컨설팅 실시계획, 컨설팅 참고자료 등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관리 자체평가 역량 지원 제도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70%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 운영 지원 컨설팅, 워크숍 참여자 만족도 70% 이상(상위 30%) * 자체평가 점검 상위 30% 부서에 우수 등급 부여	컨설팅, 워크숍 참가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컨설팅, 워크숍, 간담회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 주요 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운영 기여도 제고

- 출연연구기관의 미션과 목적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도 제고
-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 및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정책 지원 및 현안대응 기능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 강화

- 출연연구기관 평가 내실화, 기관운영 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출연연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지속적인 연구·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정부 및 산·학·연 고객만족도	87.6	88.9	89.4	90.0	최근 3년간 추세를 감안하여 '24년 0.6%p 상승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전체 평균점수 (27개 기관 점수의 평균점)	2023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에 근거)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현재·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위기, 중동 / 우크라이나 전쟁 등

-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시스템 진단 및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 대두

☞ 국책연구기관 등 융·복합 연구 체제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 시급·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 필요성 증대

☞ 정책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긴급·수시연구(정책연구지원) 활성화

□ (갈등요인 1) 다수 연구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필요성

- 융·복합 정책연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기관 간 업무영역 중복 발생 → 기관 간 이견 또는 중복연구, 수탁과제 과도 경쟁 유발 등으로 연구기관 간의 협력·상생 저해

☞ 연구기관별 미션과 목적에 기반한 정관 정비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한 연구기관의 업무와 목적 명확화 지속, 융·복합 의제 대응을 위해 분야별 협동연구 활성화

□ (갈등요인 2) 연구·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발

- 연구기관의 행정 효율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기존 제도 유지를 원하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우려

☞ 연구기관-경사연-국조실 간 지속적 협의와 다각적 설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의 혁신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 >

□ 추진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합리적인 국가연구체계 구축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융·복합 연구 및 현안대응 강화를 통해 정책연구의 국정운영 기여도 제고 추진
 - 정부부처-연구회-출연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분야별 정책방향 제안 및 정책수립 지원 등 융·복합 연구기능 강화
 - 정부부처 수요 적시 반영을 위한 수시연구 등 활성화를 통해 출연연 현안대응 기능 강화
- 출연연구기관 평가, 운영실태 및 복리후생 점검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채용협의 및 공동행정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행정비효율 제거 및 적극행정 유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분야별 융·복합 연구 추진	수시	
	주요 정책이슈 발굴·대응	수시	
	연구행정 등 제도개선 추진	수시	
	협동연구 종합연구기관 선정	2월~5월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1~4월	
2/4분기	분야별 융·복합 연구 추진	수시	
	주요 정책이슈 발굴·대응	수시	
	연구행정 등 제도개선 추진	수시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	4~6월	
3/4분기	분야별 융·복합 연구 추진	수시	
	주요 정책이슈 발굴·대응	수시	
	연구행정 등 제도개선 추진	수시	
	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7월	
4/4분기	분야별 융·복합 연구 추진	수시	
	주요 정책이슈 발굴·대응	수시	
	연구행정 등 제도개선 추진	수시	
	출연연구기관 기관운영 실태점검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각 부처, 연구회, 연구기관, 산·학·연 등 관계기관 간 회의를 통한 현안대응 및 융·복합 연구 추진
- 부처, 연구회, 연구기관 임직원 등 소통 활성화

구분	내용	세부일정
관계기관 회의	관계부처, 연구회,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등	연중
간담회, 환담 등	부처, 연구회, 연구기관 임직원 등 소통	연중

☐ 기대효과

-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정운영에 대한 연구기관의 기여도 제고
-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연구몰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지원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1500)	일반·특별회계	5,567	5,3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융·복합 연구 성과(건) 등	신규	4/4	7/5	9	연구기관간 융·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융·복합 연구 성과물 생산을 목표로 설정 (내용추가) 융·복합 연구 관련 연구지원과 지원 실적	융복합 연구를 통한 연구성과물 생산 실적 (정성지표) 관련 제도 개선, 회의 개최 등 지원 실적	관련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 관련 제도개선 전후 결과 및 회의자료 등
긴급·수시 현안 발굴·대응(건) 등	7/5	10/9	15/12	18	'23년 실적 15건 대비 20% 상향한 18건을 목표로 설정 (내용추가) 긴급·수시 현안 발굴·대응 중 연구지원과 직접 지원 및 제도개선 실적	국민생활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연구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연구지원 (정성지표) 현안 대응 연구 관련 제도 개선 정부와 연구기관 매칭 지원 실적	관련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자료
연구기관 운영실태·복리후생 점검 및 소통(점)	신규	지표 변경 및 추가	93.65/90	94	지난해 도입한 연구기관 운영실태(지난해 목표 80점)와, 복리후생 점검결과('23년 도입)를 지표로 설정(연구기관 직원 등 소통실적은 가감점으로 반영)	(연구기관 운영실태 준수율+복리후생 점검결과)/2 ±소통실적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 복리후생 점검결과 연구기관 직원 등 소통실적

기 본 방 향

- ◇ 강력한 규제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대
 -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해결하여 민생경제 활력 및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회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중립적·균형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 마련
- ◇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위한 ‘先허용-後규제 방식’ 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혁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창출 및 신산업 시장 변화 신속대응 추진
- ◇ 합리적인 규제심사 운영 및 규제 재검토 관리를 통한 규제품질 제고
 -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 국민 입장에서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규제품질 제고
 - 신설·강화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
- ◇ 정부·연구기관·경제단체 등 전문 역량을 결집하여 덩어리규제의 획기적 개선 추진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 방문 등 규제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 및 반영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4	1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규제혁신 종합만족도
1. 핵심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국민만족도
①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 규제혁신추진체계 운영실적 ■ 핵심규제 개선성과 ■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정완료 건수
①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정완료 건수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수
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개선		중요규제 개선(부대)·철회 권고율
①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품질 제고	■ 중요규제 개선(부대)·철회 권고율 ■ 재검토기한도래 규제 정비율
4. 중복·복합규제(덩어리규제)의 종합적 개선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안 마련건수
①	덩어리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안 마련건수 ■ 덩어리규제 발굴 수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소통실적 (간담회, 현장방문 등 횟수)

(1) 주요내용

□ 규제혁신 성과 창출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대

- 규제혁신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핵심규제 신속 개선으로 민생경제 활력 및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혁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창출 및 신산업 시장 변화 신속대응 추진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
-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 추진

*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관련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규제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규제혁신 종합 만족도(점)	67.9	71.6	72.7	73.4	75.2	76.5	매년 과거 5년치 평균의 102%를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28년 목표치로 76.5점 설정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일반국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12월 중순, 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핵심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민생경제 활력 및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 (규제혁신전략회의) 대통령·총리 주도로 민·관이 공동 참여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핵심 규제를 발굴, 신속한 해결책 마련
 - (규제심판)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각종 갈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단이 균형적·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권고
 - (현장건의 해소) 규제 개선 소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이견을 조정하여 규제혁신의 조속한 현장이행 지원,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규제혁신 국민 만족도(점)	69.6	70.6	72.5	73.0	'24년 목표치는 과거 3개년도 평균만족도의 103%인 73.0점으로 설정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일반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복잡한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규제혁신 추진 지연
 -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의견 수렴·쟁점 조율 및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갈등 해결 도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

□ 추진배경

- '23년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민생규제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하여 국민·기업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
- 다만, 대외 여건 악화 등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어,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 경제활동의 자유 회복을 적극 지원할 필요
→ '24년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특단의 규제혁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혁신전략회의) 대통령·총리 주재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혁신방안 발표
-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핵심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증진
- (규제심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현장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 개선방안 마련·권고
-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 해결방안 도출
- (부처별 규제혁신TF) 규제정비종합계획 과제,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 등 부처별 이행과제의 조속 개선 및 신속한 현장이행
- (기관간 협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해결방안 도출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업 강화 및 이견에 대한 조정·조율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24.1~3월	
	규제심판회의 개최(계속)		
	부처별 핵심규제 개선(계속)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계속)		
2/4분기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24.4~6월	
	규제심판회의 개최(계속)		
	부처별 핵심규제 개선(계속)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계속)		
3/4분기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24.7~9월	
	규제심판회의 개최(계속)		
	부처별 핵심규제 개선(계속)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계속)		
4/4분기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24.10~12월	
	규제심판회의 개최(계속)		
	부처별 핵심규제 개선(계속)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계속)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수요자 중심의 안전발굴·개선방안 마련 지속

- 규제혁신 현장점검, 민·관 합동 규제혁신협의체 지속 운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규제개선 관련 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수시
현장 방문	현장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기업, 협단체, 지자체 등 방문	매월
회의	민·관 합동 규제혁신협의체 회의	6, 12월

☐ **기대효과**

- 규제혁신추진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핵심규제의 신속한 정비·개선, 민생경제활력 및 국민편익 증진

-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규제혁신추진체계 운영실적	-	6	21	24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대통령·총리 주재 회의체" 분기별 2회 이상(10회) * 규제혁신전략회의 민생토론회 현안장관회의 등 규제심판회의 월 1.2회(14회)	규제혁신전략 회의 등, 규제심판 회의 개최 실적	회의 개최계획, 개최실적 등
핵심규제 개선 성과	-	9	24	26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논의 안건(12건), 규제심판회의 논의 안건(14건)	핵심규제 개선방안 안건 보고	회의 시 보고된 안건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	-	-	-	24	이견 과제 조정협의 건수 월 2회(24회)	이견과제 조정 실적	회의 개최계획 및 조정결과

(1) 주요 내용

-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규제샌드박스, 기업애로 규제개선, 기존규제 유연화 등 ‘규제 혁신 플랫폼’ 운영 및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정 완료 건수(건)	29/ (신규)	32/ (신규)	45/33	50	최근 3년간 상승세를 감안 최대 성과를 창출한 '23년에서 10% 50건을 목표로 설정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개선 과제수	규제정보화시스템 승인과제수 등 확인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규제혁신 플랫폼 운영에 따른 신·구산업간 이해갈등
 - 신구산업·업역 간 이해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연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활발한 시장진입 저해
- * (예) 수요응답형 버스 등

☞ 특정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이견 조정 추진 및 필요시 승인지연 과제에 대한 국조실 조정회의 추진

(4) 기타 :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www.sandbox.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

□ 추진배경

- 경직적인 기존 법령체제로 인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곤란
- 기존 규제로 인한 핵심 신산업 분야의 애로를 적시에 해결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안 마련,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 개최, 선제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성과제고
- (기업애로 규제개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업애로* 과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 *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5개 신산업분야
- (기타 규제개선)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성능기준으로의 규제 유연화,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 규제 개선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회의 개최	'24.1월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24.3월	
2/4분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24.4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23.4~6월	
	신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마련·발표	'24.6월	
3/4분기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회의 개최	'23.7~9월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정비	'23.7~9월	

4/4분기	신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마련·발표	'24.7~9월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24.9월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24.11~12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회의 개최	'24.12월	
	제13차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발표	'24.12월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신기술·융복합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개발자 및 창업자, 이를 활용하는 제품·서비스 이용자 등
- (이해관계집단) 기존 시장 선점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신서비스·신제품 도입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관련 기업·종사자 등
- (관련 전문가) 행정규제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연구하는 규제 전문가 및 신산업 분야별 기술·제도 전문가 등

☐ 기대효과

- 규제장벽으로 시도하지 못한 혁신기술 실증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미래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혁신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정 완료 건수(건)	29/ (신 규)	32/ (신 규)	45/ 30	50	최근 3년간 상승세를 감안 최대 성과를 창출한 '23년에서 10% 50건을 목표로 설정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개선 과제수	규제정보화시스템 승인과제수 등 확인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수(건)	63 (신 규)	64 (신 규)	50 (신 규)	64	최근 3년간 증감이 있어, 실적 중 최우수 실적을 목표로 설정	기업애로 발굴과제 글로벌 스탠다드 등 규제혁신방안 발표과제	회의체에 상정된 신산업 규제개선 성과 등

(1) 주요 내용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
 -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품질 제고
 - 규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 규제 대안 모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중요규제 개선(부대)· 철회 권고율(%)	68.1	76.1	81.3	77	- 과거 3년간 평균이 75.2%임을 감안 평균 수준보다 102.4% 이상 상향한 77%를 24년 목표로 선정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 100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개혁포털 및 규제정보화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대형재난·감염병 등에 의한 긴급 규제심사수요 발생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심사를 신속,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에 적시 대응하되, 불합리한 부분 개선
- * 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 첨예한 대립 발생
 -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 검토 후
본심사에 중요규제로 상정하여 대면 청취 및 심의·의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품질 제고 >

□ 추진배경

-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 향상
*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 신설·강화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폐지 또는 개선을 검토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타당성 제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철회 권고
 - 규제영향분석 운영 개선, 분과위 개편 등을 통한 소관부처 및 규제위원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여 개선권고율 제고 도모
- 신설·강화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 주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완화 추진
 - 피규제자인 국민·기업 등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 불편 등을 수렴하여 개선필요 규제 적극 발굴
 - 민간전문가TF의 전문성 제고, 사후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한 심사 역량 제고 및 규제정비율 향상 도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계획 수립	'24.1월	
	부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상시	
2/4분기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개편	'24.4월	
	부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상시	
3/4분기	부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상시	
4/4분기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정비	'24.12월	
	부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피규제자 및 다수 일반 국민 등 규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

☐ 기대효과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조정·방지하고, 사후에 재검토하여 불편부담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Ⅱ-1-일반재정⑧)			
① 규제개혁(7033)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301)	일반회계	15.31	17.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중요규제 개선(부대)·철회 권고율(%)	68.1	76.1	81.3	77	- 과거 3년간 평균이 75.2%임을 감안 평균 수준보다 102.4% 이상 상향한 77%를 24년 목표로 선정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개혁포털 및 규제정보화시스템)
재검토기한도래 규제정비율(%)	21	19.1	29.7	25	- 과거 3년간 평균이 23.3%임을 감안 평균수준보다 107.3%이상 상향한 25%를 24년 목표로 선정	(개선 또는 폐지된 규제 수/ 재검토기한도래 규제 수) ×100	재검토기한도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개혁포털 및 규제정보화시스템)

(1) 주요 내용

-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

*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관련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규제

- 덩어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의 실수요,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의 정책 경험, 연구기관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 단순한 법령분석 등에 근거한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을 지양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업체, 지자체 등)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건)	신규	2	17	18	'23년 덩어리 규제 개선 건수 실적 대비 상향 설정 * 2개월 주기 3건의 개선안 마련	개선안이 마련발표 (공청회 등 포함된 주요 덩어리 규제 수	대외발표(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체의 안건 상정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시 업권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및 소관부처의 이견 발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추진
- 개별 과제의 개선방안 발표 이전에 추진단(안)에 대해 소관 부처·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이견을 최소화

□ 개선안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

-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와 공동명의로 발표(보도자료)하거나, 각종 회의체 등(규제혁신 전략회의, 관계장관회의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확보
- 기 발표된 개선방안이 발표 이후 충실히 이행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각 개선방안의 진행상황을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점검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

□ 추진배경

-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단편적 접근이 어렵고 개별부처 단위 해결에 한계가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 출범(22.8월)
 - 국민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단장인 민·관·연 합동 전문조직 구성·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방위적인 덩어리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마련에 총력
 - 경제·사회 전문분야별 덩어리 규제 검토, 제도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자문위원* 의견 수렴
 - * 전직 장·차관급 자문위원(33명)이 과제발굴, 방향설정, 개선방안 마련 등에 조력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지자체)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에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발표 등 추진
 - 해당 규제를 실제 담당하고 개선을 이행(법령 개정 등)해야 하는 소관부처를 발표주체에 포함(추진단 - 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시켜 개선안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필요시 진행상황 점검)
 - * 다부처 과제의 경우 회의체(규제혁신 전략회의, 관계장관회의 등)를 적절히 활용
 - 중요 덩어리 규제 또는 개선방안의 도출이 어려운 과제(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부분 발표하거나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총리 주재 덩어리 규제 발굴 개선 전체회의	'24.1~3월	
	덩어리 규제 과제발굴 및 분석, 현장 의견 수렴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2/4분기	총리 주재 덩어리 규제 발굴 개선 전체회의	'24.4~6월	
	덩어리 규제 과제발굴 및 분석, 현장 의견 수렴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3/4분기	총리 주재 덩어리 규제 발굴 개선 전체회의	'24.7~9월	
	덩어리 규제 과제발굴 및 분석, 현장 의견 수렴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4/4분기	총리 주재 덩어리 규제 발굴 개선 전체회의	'24.10~12월	
	덩어리 규제 과제발굴 및 분석, 현장 의견 수렴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분석을 위한 필요한 사례·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간담회, 현장방문, 부처간 협의 진행
- 덩어리 규제 신규 발굴과 개선(안) 도출을 위해 총리 주재 전체회의 개최 (평균 월1회)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담회	매월
현장방문	현장 덩어리 규제 관련 애로 발굴을 위한 기업, 협단체, 지자체 방문	매월
회의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 관련 전체회의	매월

☐ **기대효과**

- 전직공무원의 정책경험, 연구기관의 전문성, 민간의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단편적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Ⅱ-1-일반재정⑧)				
① 규제개혁(7033)		일반회계	56.3	51.5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일반회계	56.3	5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건)	신규	2/3	17/15	18	'23년 덩어리 규제 개선 건수 실적 대비 상향 설정 * 2개월 주기 3건의 개선안 마련	개선안이 마련발표 (공청회 등 포함) 된 주요 덩어리 규제 수	대외발표(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체의 안건 상정 등
덩어리 규제 발굴 수 (건)	신규	39/10	42/40	43	'23년 덩어리 규제 발굴 건수 실적 대비 상향 설정	자체발굴 등을 통해 선정된 덩어리 규제 수	전체회의 또는 점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과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통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등 개최건수(회)	신규	신규	554/ 300	560	'23년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건수 대비 상향 설정	과제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횟수	개최 계획 및 결과

기 본 방 향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조정·지원 강화

- 경제 분야 정책환경 및 정책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경제 분야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및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민생경제 활력 회복,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반 공고화, 재정·세제 개편과 공공기관 혁신 지원, 세계 경기둔화, 금융 불안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정책 조정,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정책의 조정·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 육성,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추진,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정책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등 역동적 경제 구현

◇ 농림·국토·해양정책의 조정·지원 강화

- 주택 공급, 주거복지 확대 등 바탕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달성하고 GTX 확대, 철도 지하화 등 통해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및 교통불편 해소 집중
- 가축전염병(AI, ASF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 관리, 개 식용 종식 후속조치 이행 지원 등 민생 경제 최우선 추진

◇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로 조세심판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표준처리절차의 준수·우선처리제도의 정착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및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한 납세자의 참여 확대로 공정·투명성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5	1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실적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조정·지원 강화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① 재정·금융 정책 조정·지원 강화		■ 거시경제·예산·재정·금융·공정거래·조달·공공기관 정책 조정 실적 ■ 경제동향 점검·대응 실적
2.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조정·지원 강화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 재산·중소벤처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①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등 산업경쟁력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 산업 체질 혁신·무역구조 고도화·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산업경쟁력 분야 정책조정· 지원실적 ■ 산업체질 혁신·무역구조 고도화·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산업경쟁력 분야 현안 해결율
3. 농림·국토·해양 분야의 조정·지원 강화		농림국토해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①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조정·지원 강화		■ 농림·해양·국토·교통 정책현안 조정·지원 실적 ■ 농림·해양·국토·교통 정책현안 해결률
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사건처리비율
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 180일내 사건처리 비율 ■ 우선처리제도 적용사건수
②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심판결정의 신뢰 제고		■ 전체 의견진술 비율 ■ 비대면 의견진술 비율

(1) 주요내용

□ 경제분야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지원

- 高물가·高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내수·민생안정 및 경제 재도약 달성을 위한 거시경제·금융·재정 등 경제정책 조정·지원
- 수출·물가 등 경제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경기 회복 및 서민경제 애로 해소 등 당면현안 적극 해결
-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초격차 확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
- 데이터·AI·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 납품대금연동제 등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 지원
-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 안정적 관리, 가축전염병(AI, ASF, 구제역, 렘피스킨 등) 및 대형 산불 등 선제적 적극 조치 등
- 금리 상승, 높은 공사비 등 여건 악화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 상황 및 부동산시장 가격 동향 점검 등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국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실적(회)					124	134	'23년 주요 국정협의회 운영횟수 124회를 감안 매년 약 2% 상승을 목표로 '28년은 국정협의회 운영 134회를 목표로 설정(회)	주례회동,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총리-부총리 협의회 등 국정협의회 운영 횟수	회의 개최계획, 보도자료, 안건 등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高물가·高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내수·민생안정 및 경제 재도약 달성을 위한 거시경제·금융·재정 등 경제정책 조정·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경제·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4.54	4.42	4.58	4.60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22년 국정과제 만족도 수준보다 상향된 목표 제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7점 척도)	17,000여명의 일반 국민,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매년12월)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는 정부의 정책추진 여부와 별개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외부변수의 영향이 큰 상황*

* 예시: 高물가·高금리, 러-우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

- 高물가·高금리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시 조정·지원 지속 추진
- 국정과제 및 추진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경주, 관계기관 간 이견시 적극적·선제적 조정
 - 시장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단체 간담회, 현장 행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등 신속 해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재정·금융 정책 조정·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규제 혁파 및 기업활력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적극 추진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정책 전반의 조정·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무총리 메시지 및 주요 회의체 참여를 통한 정책 조정 강화
 - 경제분야 정책 수립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지원
- 경제동향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주요 지표 분석
 -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각종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제·금융·공정거래 등 소관 분야 주요정책 점검·조정	'24.1~3월	
	불법사 금융, ISDS 분쟁 등 관련 부처간 이견조율 및 추진 점검		
	주요 경제·금융 분야 회의체 대응 및 지표·동향 모니터링		
2/4분기	경제·금융·공정거래 등 소관 분야 주요정책 점검·조정	'24.4~6월	
	불법사 금융, ISDS 분쟁 등 관련 부처간 이견조율 및 추진 점검		
	주요 경제·금융 분야 회의체 대응 및 지표·동향 모니터링		
3/4분기	경제·금융·공정거래 등 소관 분야 주요정책 점검·조정	'24.7~9월	
	불법사 금융, ISDS 분쟁 등 관련 부처간 이견조율 및 추진 점검		
	주요 경제·금융 분야 회의체 대응 및 지표·동향 모니터링		
4/4분기	경제·금융·공정거래 등 소관 분야 주요정책 점검·조정	'24.10~12월	
	불법사 금융, ISDS 분쟁 등 관련 부처간 이견조율 및 추진 점검		
	주요 경제·금융 분야 회의체 대응 및 지표·동향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국민·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주요 지원대책 대상 등
- (이해관계집단) 경제·금융 등 관련 분야 관련 업계 기업·종사자,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 기대효과

- 민간 주도 경제활력 회복, 과학기술·혁신 선도로 저성장 극복
-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시 점검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거시경제·예산·재정· 금융·공정거래 공공기관 정책조정 실적(건)(공통)	36 /32	39 /35	52 /42	53	적극적인 정책 점검· 조정을 위해 조정목표를 전년대비 11건 상향 (약 26% 증가, 42→53건)	국무총리 메시지, 관계부처 회의 등 정책현안 점검 조정 건수	점검결과 제출 (회의결과, 안건 등)
경제동향 점검·대응 실적(건)	신 규	신 규	신 규	400	소관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정책분석 보고 주기 등 고려 연간 총 400건* * 일일보고(240여건) + 주기보고(160여건)	주요 경제지표· 정책이슈 분석· 점검 건수	경제동향 점검·분석· 보고서

(1) 주요 내용

- ☐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초격차 확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
- ☐ 데이터·AI·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이를 뒷받침할 국가 R&D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확충 등 추진
- ☐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및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지원
- ☐ 납품대금연동제 등 중소기업 보호 강화,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벤처기업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점)	4.69	4.70	4.67	4.68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로 전년대비 상향 조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7점 척도)	*17,000 여명의 일반국민,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매년 12월 경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가속화, 주요국들은 파격적 투자 지원과 세제혜택 등 국가대항전 전개
 - 우리 첨단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절실
 - ☐ 과학기술 진흥, 합리적 에너지믹스 실현, 중기·소상공인 보호 등은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할 핵심 아젠다
- ⇒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등 분야에 대한 국조실의 주도적인 정책 조정 및 지원 추진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등 산업경쟁력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필요
- 공기업 재무여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6년까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필요
- 기술패권 경쟁, 4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 등 기술적 大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으로서 R&D 혁신 지속 추진 필요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자동차·철강 등 전통적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산업구조 전환 대비
 -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 구축을 위한 EPA방식의 新FTA 등 협력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별 협상 적극 추진
- (에너지)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 구성으로 경제성·안전성 및 환경성 확보, 전방위적 원전 세일즈 등을 통해 수출 확대 지원
 - 에너지원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선 다변화, 수급 모니터링 등 적극 대응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도 진행
- (과학기술·방송통신·지식재산)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확립 등 추진
 - 우주경제 가동 본격화(우주청 '24.5월 개청), 임무중심 R&D 정착, 핵심인재 육성, AI 활용 확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확립 등
- (중소기업)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 지원과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민간 벤처모펀드 등을 통한 벤처기업 성장지원
 -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수출애로 중소기업 간담회, 디지털 전환, 신사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산업경쟁력 분야 대책 수립·지원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	'24.1~3월	
	○ 산업경쟁력 분야 협의체 운영 및 관계부처 의견 조율		
	○ 산업경쟁력 분야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 소통		
2/4분기	○ 산업경쟁력 분야 대책 수립·지원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	'24.4~6월	
	○ 산업경쟁력 분야 관계부처 이견 조정 및 협의체 운영		
	○ 산업경쟁력 분야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 소통		
3/4분기	○ 산업경쟁력 분야 대책 수립·지원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	'24.7~9월	
	○ 산업경쟁력 분야 협의체 운영 및 관계부처 의견 조율		
	○ 산업경쟁력 분야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 소통		
4/4분기	○ 산업경쟁력 분야 대책 수립·지원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	'24.10~12월	
	○ 산업경쟁력 분야 협의체 운영 및 관계부처 의견 조율		
	○ 산업경쟁력 분야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 소통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신산업분야 기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매 분기
현장방문	현장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기업, 협단체, 지자체 방문	매 분기
회의	특화단지 현안 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	매 분기

☐ 기대효과

- 산업·통상·에너지, 과학기술·방송통신, 중소·벤처 분야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성장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산업체질 혁신·무역 구조 고도화·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 경쟁력 분야 정책 조정·지원실적(건)	35/ 39	44/ 40	50/ 45	50	(1) 분기별 12건 이상 정책조정·지 원토록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2) '21~'23 3개년 평균 실적 43건보다 7건 높게 설정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회의 결과, 안건 등
산업체질 혁신·무역 구조 고도화·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 경쟁력 분야 현안 해결율(%)	100	100	100	100	주어진 정책 현안과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정책현안 대책 마련 건수/ 정책현안 조정·지원 수요 건수) *100	회의 결과, 관련 보고서 등

(1) 주요 내용

□ 농림·국토·해양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갈등관리 추진

- 농림·국토·교통·해양 분야는 국민 삶에 밀접한 만큼 부처간·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많고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多
- 국무조정실 중심 상시 점검, 부처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공조 강화 등을 통해 갈등 및 위기 상황 선제적 적극 대응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농림국토해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4.76	4.58	4.80	4.71	과거 3년간 평균 정책 만족도가 4.71점임을 감안, 평균 수준인 4.71%를 '24년 목표치로 선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7점 척도)	17,000여명의 일반국민,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매년 12월경)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 안정적 관리, 가축전염병(AI, ASF, 구제역, 렘피스킨 등) 및 대형 산불 등 선제적 적극 조치 등
- 금리 상승, 높은 공사비 등 여건 악화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
상황 및 부동산시장 가격 동향 점검 등 통해 국민 주거안정 도모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지속
- GTX 개통 및 착공, 철도지하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교통 분야 갈등 조정 등 원활한 정책 수립 지원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조정·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농림·해양·국토·교통 분야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가격 안정, 주거 안정, 교통 편의 및 격차 해소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상당
 -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업·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안 갈등 및 위기 상황을 적기 조정하고,
 - 국정과제 및 중점 과제는 상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 지원, 정책 개선 유도 등 국민생활 편의 증대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농림) 기상악화·작황 부진 등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균형 및 높은 물가 안정적 관리, 개 식용 종식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가축전염병 및 대형 산불 등 긴급 현안은 적시 대응 통해 확산 저지 및 국민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안정적 농업경영 조성 및 스마트농업 등 미래성장산업화 지원
- (해양)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등 어촌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해양사고 예방·대응
- (국토) 고금리, 고물가, 공급 규제 여파 등으로 부진한 주택 공급 확대 통해 주거안정 기반 강화 및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
- (교통) GTX 노선별 개통 및 착공 등 공정관리 및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요금·운행 편의 정보 제공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신공항 건설 등 교통 분야 갈등 조정 통해 국민 이동 편의 제고
 -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 혁신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관련 부처간 이견조정 및 실무협의	'24.1~3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 안건 상정		
	○ 정책추진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2/4분기	○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관련 부처간 이견조정 및 실무협의	'24.4~6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 안건 상정		
	○ 정책추진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3/4분기	○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관련 부처간 이견조정 및 실무협의	'24.7~9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 안건 상정		
	○ 정책추진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4/4분기	○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관련 부처간 이견조정 및 실무협의	'24.10~12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 안건 상정		
	○ 정책추진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중립적인 시각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 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방문 및 간담회	1~3월
현장방문	개 식용 종식 추진 이행 상황 점검	4~6월
현장방문	교통 현황 및 수송·안전대책, 시설 등 점검	7~9월
회의	생활물가 현황 및 안정화 방안 점검	10~12월

☐ 기대효과

- 긴급 발생 현안은 선제적으로 신속히 파악 및 해결하고, 갈등 지속 현안은 국무조정실 중심 조정 통해 국민 신뢰 및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농림·해양·국토·교통 정책 현안 조정지원 실적(건)	35 / 30	44 / 40	46 / 46	48	'23년 실적치에서 5% 상향 설정	위원회, 부처 조정회의, 정책 현안 조정·점검 회의 상정건수	개최계획 제출 (공개 안건인 경우, 안건 또는 결과 제출)
농림·해양·국토·교통 정책 현안 해결율(%)	-	100 / 100	100 / 100	100	'23년 실적(100%) 유지 목표 설정	(정책현안 해결건수/정책현 안 조정지원수요) *100	관련 대책보고서, 회의결과, 현장점검실적 등

(1) 주요 내용

□ 신속한 사건처리와 청구인 참여 확대를 통하여 심판결정 및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제도 개선 및 운영·관리강화 등을 통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의견진술권 등 청구인 참여 및 절차적 권리 적극 보장

* (운영 및 관리강화)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조정업무 결재단계 축소 등을 통한 조정검토기간 단축 및 심판조사관 직접 사건처리 등
(절차적 권리보장) 2주전 회의개최 통지 등을 통한 의견진술권 보장 및 사전열람제도 등을 통한 방어권 보장 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조세심판 사건처리 비율(%)	73.2	78.1	82.3	75.0	사건 접수건수 및 난이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예년 목표 수준 (75.0%)으로 설정	총처리건수 / (이월건수 + 접수건수) × 100	내부전산망자료 및 통계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 등 외부환경요인에 따른 청구사건의 건수 증가* 및 심판사건의 난이도 상승**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과 그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저하 및 갈등 발생 우려

* 접수건수 : ('08년) 5,244건 → ('23년) 16,781건 [3.2배 ↑]

** 불복 내용도 '단순 사실확인' 중심에서 '복잡한 사실확인(회계처리 등)을 포함한 법령해석 및 새로운 거래의 출현에 따른 과세(디지털세, 파생상품 과세) 여부' 등을 중심으로 변화

⇒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운영·관리강화* 등 노력을 통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및 청구인의 참여도 제고로 심판당사자의 신뢰 강화

* 인력구성 내실화, 절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강화 등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

□ 추진배경

- 청구인(납세자)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기대하나, 청구사건의 양적·질적 증가 등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 예상

* 연도별 심판업무 현황

- 접수건수 :	(‘20년) 12,795건 → (‘21년) 13,025건 → (‘22년) 10,373건 → (‘23년) 16,781건
- 이월건수 :	(‘20년) 3,563건 → (‘21년) 4,441건 → (‘22년) 3,249건 → (‘23년) 3,545건
- 처리건수 :	(‘20년) 12,282건 → (‘21년) 12,147건 → (‘22년) 11,565건 → (‘22년) 16,485건
- 처리비율 :	(‘20년) 77.5% → (‘21년) 73.2% → (‘22년) 78.1% → (‘22년) 82.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적구성의 전문성 및 합리성을 높이고, 절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 제고
 - (인력구성 내실화)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배치, 공모·인사교류 등*을 통한 실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공정한 심판처리 추진
- * 전부처 공모 및 전문임기제(변호사·회계사) 채용을 통한 신규 임용, 정책부처(기재부·행안부)와 인사교류
- (운영·관리 강화) 심판부간 협업을 통한 병합사건 처리, 결정서 작성·조정검토·재심기일 지정 등 절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통해 심판결정의 신속성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관리 지속추진	'24.1~3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2/4분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관리 지속추진	'24.4~6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3/4분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관리 지속추진	'24.7~9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4/4분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관리 지속추진	'24.10~12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인 처분청, 대리인, 타 불복기관 등과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방안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 방안 등 논의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세법개정 건의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쏜직원 세법개정 건의	3월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	조세불복기관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3월
정책자문위원회	신속한 사건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논의	6월, 9월, 12월
워크샵	쏜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통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 심판부의 전문성 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논의	5월, 10월

□ 기대효과

-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세금 그 자체뿐 아니라, 납세 협력 비용 등 청구인 개인의 부담을 조기에 경감시켜줌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180일내 사건처리비율 (%)	54.3	50.3	67.3	57.3%	3년 평균(57.3%) 수준	(180일내 처리사건수 / 해당 연도 처리사건수) × 100	내부전산망 통계자료
장기미결사건 비율 (%)	4.2	17.0	9.6	10.3	3년 평균(10.3) 수준 장기미결 비율 산출 방식(모수) 변경 전 : 장기미결사건수/당해연도 접수건수 → 후 : 장기미결사건수/당해연도 이월건수	(장기미결 사건수 / 해당 연도 이월건수) × 100	내부전산망 통계자료

〈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심판결정의 신뢰 제고 〉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에 따라 사건 진행상황, 의견진술 등 사건처리 과정 및 심판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청구인의 수요와 기대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청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심판 절차 및 제도 등의 적극 시행
 - (조정제도)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사건 등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청구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 5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중 특정사안(① 상속·증여 부동산 시가평가, ② 증빙 불분명한 영세사업자 수입 금액에 대한 조정위원회(전문가 구성)의 조정안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
 - (절차적 권리)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열람제도*, 순회심판·현장확인**, 의견진술제도*** 등 시행
 -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관회의 전 그 신청인에게 사건조사서(안건)를 열람토록 함
 - ** (순회심판) 원거리 지방납세자를 위해 청구인 소재 지역에서 심판관회의 개최 (현장확인) 심판조사관 등이 과세물건 소재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 *** 청구인이 직접 심판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화통화로 의견을 진술
- 국선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보호
 - * 국선대리 사건 범위확대(청구액 3천만원→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 추가), 지방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순회심판 실시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운영·관리 지속추진	'24.1~3월'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2/4분기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운영·관리 지속추진	'24.4~6월'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3/4분기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운영·관리 지속추진	'24.7~9월'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4/4분기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운영·관리 지속추진	'24.10~12월'	
	심판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 참여확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인 처분청, 대리인, 타 불복기관 등과 적극적인 참여 및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 논의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세법개정 건의	청구인 참여확대 제고를 위한 조직원 세법개정 건의	3월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	조세불복기관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청구인 참여확대 제고	3월
정책자문위원회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논의	6월, 9월, 12월
워크숍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청구인 참여확대, 심판부의 전문성 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논의	5월, 10월

☐ 기대효과

-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심판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의견진술건수 (건)	5817	5158	4988	5311	3년 평균(5,311건) 수준	해당 연도 의견진술 사건수	내부전산망 통계자료
국선대리인 사건 처리건수 (건)	16	36	27	26	3년 평균(26건) 수준	해당 연도 국선대리인 사건 처리 건수	내부전산망 통계자료

기 본 방 향

◇ 보건·복지 분야 조정·지원 강화

- 복지·돌봄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 및 국가책임 교육·돌봄 확대, 대학경쟁력 강화 등 교육 개혁 정책 수립·지원
- K-컬처 및 K-콘텐츠 활용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조정 강화

◇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으로 국민안전 확보

- 각종 자연·사회·환경 재난 대응 및 안전·환경 정책 총괄·조정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지속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예방

◇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직업훈련 강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개혁 및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등 추진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종합·조정하는 등 식품의약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5	1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국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대응실적
1. 보건·복지 분야 조정·지원 강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① 보건·복지정책 추진 지원 및 조정 강화		■ 보건·복지분야 정책 현안 조정·지원건수 ■ 보건·복지분야 정책 소통 건수
2.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조정·지원 강화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①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강화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분야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분야 정책 소통 건수
3. 안전·환경 분야 조정·지원 강화		안전·환경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① 안전·환경 정책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 안전·환경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 안전·환경 분야 정책 소통 건수
②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정책 조정·지원 강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관련 조정·지원 건수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과제 이행률(%)
4.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조정·지원 강화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①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추진 지원 및 현안 관리		■ 고용노동 정책현안 해결률(%) ■ 식품의약 정책현안 해결률(%) ■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소통 건수(건)

(1) 주요내용

-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의료개혁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관리 △정책 조율 및 범정부 대책 마련 지원
△성과창출 지원·홍보 등 추진
- 국가책임 교육·돌봄 확대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 핵심 교육 개혁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이행 지원
- K-컬처 활용 관광 경쟁력 제고 및 국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다양한 가족지원 및 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요 문화·체육·여성 정책 수립·이행 지원
-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환경 분야 정책 지원 및 자연·사회·환경 재난 적극 대응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재난·안전 정책 관리·조정 기능 강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이행 점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집중관리 지원 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 조정·지원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수행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국정협의회 운동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실적(회)	신규	215	237	230	236	259	최근 3년간 주요 국정협의회 운영횟수인 235회를 기준으로, '28년 목표를 259회로 설정(매년 2% 상승) *단, 중대본 운영실적은 제외	주례회동,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 총리·부총리 협의회, 관계장관 회의 등 국정 협의회 운영 횟수	회의 개최계획, 보도자료, 안건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다양한 자연·사회 재난 발생, 기후위기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불확실성 증대
- 산업시대의 노동법 체계와 투쟁적 노사문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연금의 지속가능성 위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형 교육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연금·교육 개혁 필요
- 사회분야 정책 추진에 따른 각 부처·이해관계자 간 이견

□ 갈등관리계획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 총리실 주재 회의체를 통해 부처별 이견 조정 및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지원
- 사회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 고용식약 등 각 분야별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조정 및 대책마련 지원
- 위기 수준별 대응단계 발령,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구축·운영 등 빈틈없는 리스크 대응

(1) 주요 내용

-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의료개혁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관리 △정책 조율 및 범정부 대책 마련 지원
 △성과창출 지원·홍보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점)	5.06	4.64	4.88	4.93	'23년 보건·복지 관련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평균 점수(4.88)에서 0.05점 상향된 4.93점을 금년도 목표치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7점 척도)	일반국민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매년 12월경)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인구구조 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추세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예상
-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부처별로 산재한 복지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보건·복지 정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존재하여,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발생 가능성 농후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갈등요인에 대한
 선제적 파악·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보건·복지정책 추진 지원 및 조정 강화 >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은둔 등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 및 다양한 복지수요 지속 증가
 -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필수의료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나 인력공급은 부족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건·복지분야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등
- 보건·복지분야 정책 조율 및 범정부 대책 마련 지원
 -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방향 설정 및 부처 이견 조정 등 지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범정부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분야 정책 성과창출 지원 및 홍보
 - 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 및 홍보효과 창출을 위해 국무총리 현장행보(간담회, 현장방문, 면담, 행사 등)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건·복지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24.1~3월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현장점검, 총리 행보 등		
2/4분기	보건·복지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24.4~6월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현장점검, 총리 행보 등		
3/4분기	보건·복지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24.7~9월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현장점검, 총리 행보 등		
4/4분기	보건·복지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24.10~12월	
	혹한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현장점검, 총리 행보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보건·복지 업무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종사자 등과 소통 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의료개혁 관련 현장방문	수시
현장방문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	연중

☐ 기대효과

-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관련 국정과제 성과 창출 지원 →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보건·복지분야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건)	10/10	14/10	19/12	21	최근 3년간 평균건수(약 14건) 대비 50% 이상(7건) 상향, 전년도 실적 대비 10%(2건) 이상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현안 조정 지원 건수	회의계획 및 결과 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소통 건수(건)			신규	18	신규 지표로서 매월 1.5회 이상 보건·복지 분야 적극적 현장 소통을 위해 18건을 목표치로 설정 * '23년 총리님 현장행보, 간담회 실적 총 11건 대비 164% 수준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 건수	보도자료, 행사계획 및 결과 등

(1) 주요 내용

- (교육) 국가책임 교육·돌봄 확대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 핵심 교육개혁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이행 지원
- (문화·체육·여성) K-컬처 활용 관광 경쟁력 제고 및 국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다양한 가족지원 및 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요 문화·체육·여성 정책 수립·이행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4.69	4.45	4.62	4.65	최근 3년간 관련 국정과제 평균점수(4.58)와 최근 추세를 고려, 작년 실적치 대비 0.03점 상향한 4.65를 목표치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7점 척도)	일반국민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매년 12월경)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늘봄학교 전면시행, 사교육비 증가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우려 심화
⇒ 리스크·갈등 선제적 관리, 주요 정책 수립 지원 및 점검 등 대응
- 세계 콘텐츠 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국제관광 회복세 등 고려,
각국 시장우위 선점 경쟁 심화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필요성 증대
⇒ 부처간 소통 확대, 신기술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육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 증가
⇒ 국가책임 강화, 대응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강화 >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교육정책 중요
 - K-컬처·K-콘텐츠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 및 국민향유 확대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추진 지원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 양육환경 개선 등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추진 지원
- ⇒ 교육·문화·여성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리스크·갈등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질없이 수립·이행되도록 관리·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육)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및 학교교육력 제고 등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확립
 - 대학 규제개선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 분야 인재 육성 등 핵심 교육개혁 정책의 차질없는 수립·이행 지원
- (문화·체육) 글로벌시장 목표 콘텐츠·관광·스포츠 활성화, 보편적 문화·스포츠 복지 실현, 국가유산체제로의 이행
 - 문화예술·체육 수요진작 및 내수 회복, 콘텐츠·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 (여성)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 등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및 현안 관리·조정	'24.1~3월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현장 소통 추진		
2/4분기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및 현안 관리·조정	'24.4~6월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현장 소통 추진		
3/4분기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및 현안 관리·조정	'24.7~9월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현장 소통 추진		
4/4분기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이행 지원 및 현안 관리·조정	'24.10~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현장 소통 추진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관광혁신 민관협의회 등 개최,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지원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늘봄학교 현장방문 등	수시
회의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관광혁신 민관협의회 등	매월

☐ 기대효과

- 교육개혁 분야 주요 정책과제 성과 창출을 통한 인재양성 기반 내실화 및 대국민 신뢰도·만족도 제고
- 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현안 조정·해결을 통한 대국민 신뢰 및 만족도 제고, 국가유산체제 성공적 전환을 통한 국격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분야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20 /10	20	전년도 실적 초과달성(200%)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정책현안 조정 지원 건수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분야 정책 소통 건수			62 /35	62	전년도 실적 초과달성(177%)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건수
						조정회의 계획 및 결과 등 행사 계획 및 결과 내용 등

(1) 주요 내용

□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 강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재난·안전 정책* 관리·조정 기능 강화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24.1월), 시기별 안전대책, 법정계획 등
- 재난·안전 현안 민간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지자체 협업 확대를 통해 정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
-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 낙동강 물문제 및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 해결 지원, 일회용품·과대포장 등 환경분야 현안 해결

□ 미세먼지 정책 조정·지원 강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행 점검 및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집중관리 지원 등 미세먼지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강화(지속)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안전·환경분야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4.88	4.69	4.74	4.79	안전·환경 현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23년보다 0.05점 상향한 4.79를 목표치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7점 척도)	19,200명의 일반 국민, 정책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매년 11~12월 경)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다양한 자연·사회재난 발생의 영향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등 국가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 증대

→ 재난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지속 점검

□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자연·사회재난 증가,
지역간 환경 갈등 빈발 및 장기화

→ 이해관계자들(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및 협업을
통한 갈등 완화 및 장기 지속 과제 해결 추진

□ 미세먼지 감축 정책 가속화 및 고농도 대응 강화

○ 사업장, 발전, 자동차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및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 → 겨울철 계절관리제 추진 등을 통한 집중감축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신속 대응, 수습·지원 및 후속대책 수립, 환경분야 갈등·현안 해결 및 사회 갈등 최소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심 재난·안전 현안에 선제적 대응
 -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재난안전예산 등 법정 사항을 심의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 주요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다수 부처 협업 필요 시기·계기별 재난·안전대책* 적극 조정·지원
 - *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 총괄(행안부), 화재(소방), 산불(산림청), 한파(복지부) 등
 - 중앙-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재난·안전 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등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
 - * (예)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여름 휴가철 관광지 안전대책 논의 시, 지자체장 참여
- 홍수·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화재·붕괴·해양 사고 등 사회재난 신속 대응 및 대책 마련 지원
 - 야간, 주말 포함 24시간 재난 상황 즉시 보고 및 필요시 긴급 지시와 유관기관 전파 등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상황관리
- 낙동강 물문제, 댐 건설 계획 및 중장기 가뭄대책* 등 물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지원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폐기물, 환경보건 분야 이슈관리
 -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댐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된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강·낙동강·금강 유역 중장기 물공급 대책' 확정 예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연휴 안전관리 대책 점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소통 봄철 지역축제 안전점검 홍수기 대비 댐·저수지 안전점검 가습기살균제, 태배 과대포장 관련 회의체 점검 총리실-행안부 현안간담회(수시) 기타 안전·환경정책 조정 및 주요 현안 관리	'24.1~3월	
	안전·환경정책 추진 현장 점검		
2/4분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소통 폭염·물놀이 등 여름철 안전대책 점검 국가물관리위원회 '25년도 재난안전예산 협의·검토 총리실-행안부 현안간담회(수시) 기타 안전·환경정책 조정 및 주요 현안 관리	'24.4~6월	
	안전·환경정책 추진 현장 점검		
3/4분기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소통 태풍, 홍수,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 관련 대응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점검 총리실-행안부 현안간담회(수시) 기타 안전·환경정책 조정 및 주요 현안 관리	'24.7~9월	
	안전·환경정책 추진 현장 점검		
4/4분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5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협의·검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소통 겨울철 안전대책 점검 수도권 매립지 관련 회의체 점검 총리실-행안부 현안간담회(수시) 기타 안전·환경정책 조정 및 주요 현안 관리	'24.10~12월	
	안전·환경정책 추진 현장 점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효과적 정책 조정을 위한 이해도 제고 및 다양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소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간담회(브라운백 세미나 등)	분기별
현장방문	재해 취약지역 및 복구지역 방문 및 현장 의견 청취	수시
회의	관계기관(행안부, 지자체 등) 회의	수시

□ 기대효과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 및 개편 →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
- 각종 재난 및 사고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순환경제 실현으로 안전 환경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안전·환경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44 /36	52 /40	70 /48	60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55)보다 높은 목표치(5% 이상) 설정	정책현안 조정· 지원 건수	조정결과 제출 (회의결과, 안건 등)
안전·환경 분야 정책 소통 건수	27 /22	29 /24	59 /28	40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38)보다 높은 목표치(5% 이상) 설정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 건수	행사계획 및 결과 등 제출

<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정책 조정·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24년에는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년)」을 수립할 필요
-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관련 범정부 차원 수행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점검·종합평가
 - 제1차 종합계획의 과제별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그동안 추진된 정책 종합평가를 추진, 2차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수립
 -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범부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 고농도 미세먼지에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배출저감·관리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대책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 지원

- *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mu\text{g}/\text{m}^3$ (주의보) 초과 예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3년 추진계획 수립	~'23.2월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 이행점검	~'23.3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	~'23.3월	

2/4분기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분기 이행점검	~'23.5월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 이행결과 평가	~'23.5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	~'23.6월	
3/4분기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분기 이행점검	~'23.8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	~'23.9월	
4/4분기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3분기 이행점검	~'23.11월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종합평가('20~'24)	~'23.12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25~'29)	~'23.12월	
	제6차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계획 마련	~'23.11월	
	제6차 계절관리제('24.12~'25.3) 이행점검	~'23.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평가 및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연중)

* 미세먼지 저감·관리, 취약계층 보호 등에 관한 공공, 민간, 생활분야

- 제1차 종합계획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발전사업자,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자체 등 현장 방문
- 범정부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對관계부처·지자체 정책 조정·지원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미세먼지 관련 공공, 민간, 생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	연중
현장방문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한 미세먼지배출사업장,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자체 등 방문	연중
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본회의, 민간위원 전체회의, 분과위 등 개최	연중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보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관련 조정·지원 건수			신 규	15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 본회의·분과회의 및 현장행보, 간담회 계획 등 15건	미특위, 현장행보, 간담회 등 개최건수	미특위, 현장행보, 간담회 개최계획 또는 개최결과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 획 과제 이행률(%)	88	88	90	9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종료시점 인 '24년까지 과제이행 완료를 위 해 최근 2년 목표치보다 상향조정	(정상이행 과제 개수 / 과제 총 개수) * 100	과제점검 결과보고서

(1) 주요 내용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 분야 정책 및 현안 관리

-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자·기업 등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주요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 시 부처간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사안을 조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인구·산업구조 변화 관련 갈등요인 선제적 파악 및 국민취업 지원제도·직업훈련 동향 점검 등을 통해 고용안정 강화 지원
-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불법·부당관행 근절 및 사회적 대화 지속,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제도 개선 지원
-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연대 노동생태계 조성을 통해 이중구조 개선 지원

□ 국민건강을 위한 체계적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관련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 마약류대책협의회(국조실장 주재)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추진 지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 총괄
 - 식·의약품 관련 상황판단 및 대응수준 결정 등 현안 관리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고용·식품·의약품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4.70	4.51	4.64	4.67	일자리, 고용안전망 등 정책 현안 조정·해결 등을 통한 정책 만족도 제고 * '21~'23년도 평균 정책만족도(4.62점) 보다 0.05점 높은 4.67점으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7점 척도)	약 19천명의 일반 국민 정책수요자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 매년 12월 경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 빈일자리 및 구인난 확산,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비 필요
 - 최근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에 따른 효율적 관리, 노동 개혁 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이 중요하며, 향후 국회 상황을 고려한 입법 추진 병행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사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망 확대·권익보호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 확대 가능성
-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식·의약품 현안의 특성상, 위험성이 객관적 수준보다 과장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상존

□ 갈등관리계획

- 빈일자리 해소 노력, 현장 요구에 맞는 근로시간 개편 등 일련의 고용·노동 정책의 효과와 정부의 노력 강조
 -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추진시 또는 이해관계자·노사 간 갈등 발생시, 국민·국회·언론 대상 소통 강화 및 신속한 조정
- 식품·의약품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안 대응 시 객관적 위험요인과 함께 국민 정서 적극 고려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추진 지원 및 현안관리 〉

□ 추진배경 (목적)

- 빈일자리 해소,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등 고용노동 정책은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첨예하고 부처간 이견 및 갈등 多
- 생산·소비 등 식품의약 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식품의약 안전분야 주요 정책 관련 종합·조정이 필수
- ☞ 차질없는 정책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보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처별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조율 및 범정부 정책 마련 지원
 -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부처 이견 조율 등 지원, 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대책 등 마련
- 주요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고용노동·식품의약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성과 창출 지원
 - 주요 정책의 현장 안착 및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현장 행보(우수기관, 정책수혜자 대상 방문 및 간담회 등) 등 추진

< 2024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리 및 조정	'24.1~3월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24.1~3월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련 현장 행보	'24.1~3월	
2/4분기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리 및 조정	'24.4~6월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24.4~6월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련 현장 행보	'24.4~6월	
3/4분기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리 및 조정	'24.7~9월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24.7~9월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련 현장 행보	'24.7~9월	
4/4분기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리 및 조정	'24.10~12월	
	주요 국정협의회 개최·운영	'24.10~12월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관련 현장 행보	'24.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근로자, 사용자 및 국민(소비자)
- 이해관계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관련 단체·업계 등

□ 기대효과

-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 및 관련 국정과제 성과 창출 지원 →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3	'24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Ⅱ-1-일반재정②)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	183백만원
■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323)		일반회계	-	183백만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고용·노동 정책현안 해결률(%)	90.9 /85	92.9 /85	94.1 /85	85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인 85%로 설정 ※ 고용·노동 현안으로 발굴되는 협의·조정 과제가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경영계, 노동계)간 대립이 첨예하여 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 85%는 매우 높은 수준	(고용·노동 정책 현안 해결 건수 / 고용·노동 정책 현안 조정·지원 수요 건수) * 100	회의 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식품·의약 정책현안 해결률(%)	-	-	97.3 /90	85	작년 대비 측정산식에 식품의약 관련 시행규칙 재가 사항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국조실 주도의 조정실적으로 수정하여 지표 달성의 난이도가 대폭 상향된 점을 고려해 85% 설정	(식품·의약 정책 현안 해결 건수 / 식품·의약 분야 현안 발생 건수)	연간 식·의약 현안 목록 및 개별 현안에 대한 조정·지원·소통 실적 (회의 결과, 보도자료, 브리핑 자료 등)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소통 건수(건)	-	-	-	12	신규 지표로 작년도 현장행보 및 간담회 등 추진건수('23년, 10회) 보다 적극적 목표(20%↑)를 설정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 건수	행보, 간담회 개요 등 제출

기 본 방 향

◇ 청년정책 조정·지원 및 청년소통·참여를 통한 청년의 삶 개선

- 범부처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주요 현안 조정·지원하여 청년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청년의 삶 개선을 지원
-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인지도·체감도 제고 및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추진

- 당면 글로벌 현안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ODA 종합 전략·정책 수립·추진
- ODA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및 사업정보 관리 강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NDC’ 수립(’23.4월)에 이어, 올해는 본격적 이행성과 창출과 국민 실질적 체감도 제고 추진
- COP28·CFE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 △ 2035 NDC 수립 착수 △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 탄소중립 정책 마련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조정·지원

-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자치·분권 모델 확립,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미래 비전 구현 등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실현 추진
- 새만금 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등 중요 정책에 대한 통합·조정(새만금위원회 운영) 지원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0	4	4	7	1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I.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지원		청년정책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①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 정책조정·지원실적(건) ■ 청년 관련 현안해결률(%)
	②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청년DB 연간 등록 목표인원 달성률 ■ 중앙정부 청년위원 위촉비율(%)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안 개선과제(건수) ■ 온라인 청년센터 고객만족도
2.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ODA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점)
① 체계적인 ODA 전략 수립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유·무상 종합전략 수립 실적 ■ ODA 사업 연계·조정 실적
	② ODA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 평가결과 환류조치 이행률 ■ ODA 유관기관 아웃리치 성과 ■ 통합 홍보 조정 성과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탄소중립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① 범부처 탄소중립 정책 수립·조정 및 국민소통 지원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현안 조정 실적(건수)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소통·홍보 실적(건수)
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정·지원		관련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①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원		■ 특례 관련 조정·지원 건수(건) ■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 관련 조정·지원 건수(건) ■ 지자체, 관계기관 등 소통 실적(회)
	②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지원	■ 새만금위원회 운영실적(회) ■ 새만금사업 개발율(%) ■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실적(회) 및 정책 조정·반영 실적(건)

(1) 주요내용

□ 청년정책 조정·지원 및 참여·소통 강화

- 범부처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청년참여·소통 등을 통해 청년정책 인지도·체감도를 제고하고 청년의 삶 개선을 지원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추진

- 복합적 글로벌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력에 걸맞은 ODA 및 선진국형 ODA 추진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이행성과 창출

- 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환류, 현장·민생 중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 지역·민간 주도 탄소중립 추진 확산 등

* ①속도감 있는 이행과 체계적 환류 통한 정책 완성도 제고 ②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조정을 통한 체감성과 거양 ③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국제협력 강화 ④국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

□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원

- 지역 여건,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자치·분권 모델 확립,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미래 비전 구현 등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실현 추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지원하여 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어려움 해소
- 청년정책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전달체계 개편 및 청년정책 기반 구축·강화

□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청년의 인식이 국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 청년 참여 및 소통·홍보 확대
- 지자체 및 지방 청조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 간 이해도 제고 및 지역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청년 관련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신규	4.51 (목표 4.45)	4.50	'23년도 목표치 대비 10% 이상 높은 수치로 적극적 목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어려움 지속 및 실질적인 정책참여, 권한 확대 지속 요구
→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및 참여기회 확대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일자리·주거 등 삶의 전분야에서 청년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우며, 코로나19 지속 및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가속화에 대응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
- 청년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통해 청년의 삶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조정 및 지원 기능 강화
 -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지원하고, 범부처 청년정책 통합 조정·관리
 - 취약청년 등 청년정책 사각지대 및 개선 필요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분야별 맞춤형 정책 마련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하고, 청년정책 통계 등 근거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24.1~3월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4분기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24.4~6월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 청년친화도시 운영 매뉴얼 배포		
3/4분기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24.7~9월	
	·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4/4분기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24.10~12월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 청년삶 실태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의견 수렴 확대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분기별 1회
회의	9개 부처 전담조직 협의회 개최	매월 1회
간담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반기별 1회

☐ 기대효과

- 청년정책 관련 현안 해결 및 청년의 삶 개선 등 성과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정운영(012)-국무총리실 행정지원(7000)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88.43	89.84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316)		일반회계	88.43	89.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청년정책 조정·지원 실적(건)	17/ 12	21/ 20	23/ 22	24	한정된 조직·인력으로 업무 추진함을 감안해 전년 실적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위원회, 관계부처 회의 등 정책현안 조정지원횟수	회의 개최계획, 개최실적 및 결과 등
청년 관련 현안 해결률(%)		신 규	100 /90	95	법령정비,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정책 현안교涉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목표치를 95%로 설정	(정책현안 대책 마련 간수/정책현안 조정·지원 수요 (요청) 건수)*100	회의 결과, 관련 보고서 등

<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 추진배경

- 청년은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로 국정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
-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추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청년의 인식·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
 - 청년DB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청년들을 확보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청년참여 정부 위원회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국정 전반에 청년 의견 반영
 - 청년정책 공론장을 형성하여 일반청년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평가 시 청년의 참여·주도성 적극 반영
-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및 정책 홍보를 통한 청년정책 전달력 제고
 -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주간을 운영(청년정책박람회 등)하고, 온라인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알기 쉽도록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 전달체계 마련
-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청년정책 활성화
 -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운영하여 중앙-지자체 업무 현황 공유, 지자체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 지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 관련 현안, 애로사항, 정책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여 청년정책 발전 방향 모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4.1~3월	
	· 청년보좌역 워크샵 - 북한이탈청년 멘토링 행사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2/4분기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24.4~6월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 청년DB 활용 집중 홍보활동 전개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 용역계약 체결		
3/4분기	· 청년의날 및 청년주간 행사 개최	'24.7~9월	
	· 청년참여 거버넌스 개최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 지역 청년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4/4분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4.10~12월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재지정 및 청년위원 현황 점검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 완료		
	· 청년참여기구 교류회 개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청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간담회, 공론장, 지자체 청년업무 담당자 교류회 등을 통해 수렴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청년 참여 간담회 개최	4~8월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 이슈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사업 운영	6~11월
청년참여기구 교류회	청년참여기구 교류회 개최	10~12월

□ 기대효과

-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 청년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
- 청년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인지도·체감도 제고
- 중앙-지방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 청년 삶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정운영(012)-국무총리실 행정지원(7000)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88.43	89.84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316)		일반회계	88.43	89.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청년DB 연간 등록 목표인원 달성률			163% / 80%	80%	(연간 등록인원 / 1.8만명) × 100%	청년DB 통계자료
중앙정부 청년위원 위촉비율(%)			신규	2%	청년위원 위촉 수 / 청년참여 정부위 위촉위원 수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관련 통계(행안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제안 개소(건수)	-	-	82개 / 45개	120개	개선과제 제안 개수	내부자료
온라인 청년센터 고객만족도	73.3%	77.8%	84.8%	86.1%	온라인청년센터 고객 만족도 조사 (전년 대비 1.5% 증가)	만족도조사 보고서

(1) 주요 내용

- ☐ 정부 대외전략을 ODA로 뒷받침하기 위해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사업 연계·조정
 - 선제적·체계적 ODA집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재원 배분방향 등이 담긴 종합계획, 이와 연계한 국가·분야·영역별 전략 수립·추립
 -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사업간 및 사업-전략간 연계 강화 및 패키지 사업 집중 발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ODA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점)	-	-	-	65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조사로 결과값 예측이 어려운 점수임에도 중위값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ODA 정책전문가 만족도 조사(100점 척도)	연구용역을 통한 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협력을 통한 전략적 공조 필요성 증가

☐ 갈등관리계획

- ODA 주관기관(기재·외교부) 이원화, 집행기관 분절화로 인해 정책수립 시 이견 첨예, 사업간 중복 등 ODA 효율성 저하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ODA 통합·조정 강화,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정책현안T/F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강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ODA 통합 정책·전략 마련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 추진배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ODA를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 국제 상황 변화, ODA 규모 증가* 등에 따라 ODA 추진방식·체계에 대한 질적 변화 필요성 증가

* 2024년 ODA 총 규모는 6.3조원으로 전년 대비 39.5%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ODA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집행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ODA 혁신로드맵(가칭)’ 수립·추진
 - 사업 수과정의 통합성 강화, 현장중심 관리, 대형 패키지 확대, 사후관리 강화, 전문인력 확충 방안 등 포함
- 주요 분야(보건)·권역별(중남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적 관점의 ODA 추진방향 제시
- ODA 중점협력국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ODA 지원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ODA 재원의 효율성 강화
 -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정치 거버넌스 변동·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CPS 수정(안)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24년 2월	
	아세안 ODA 추진전략 마련	'24년 2월	
	'24년 ODA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마련	'24년 2월	
	ODA 사업전략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24년 3월	
2/4분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24년 4월	
	'25년 국제개발협력 재원 배분 방향 마련	'24년 4월	
	ODA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24년 4월	
	ODA 사업전략협의회 개최	'24년 6월	
3/4분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24년 7월	
	ODA 혁신로드맵 마련	'24년 7월	
	'24년 ODA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마련	'24년 7월	
	보건 ODA 기본계획 마련	'24년 7월	
	ODA 사업전략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24년 9월	
4/4분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24년 10월	
	중남미 ODA 추진전략 마련	'24년 10월	
	패키지 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24년 10월	
	중앙아시아 ODA 추진전략 마련	'24년 12월	
	남아시아 ODA 추진전략 마련	'24년 12월	
	국가협력전략(CPS) 수정안 마련	'24년 12월	
	ODA 사업전략협의회 개최	'24년 12월	
	'25년 ODA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마련	'24년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합동T/F,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ODA 관계부처·시행기관·국제기구와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 **(관계부처)** 기재부, 외교부 등 △**(시행기관)** 지자체·수출입은행· KOICA 등
△ **(국제기구)** OECD DAC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주요 시행기관 협의회	매월
현장방문	지역·분야별 전략 관련 현지 방문	3분기
회의	개발협력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수시

□ 기대효과

- ODA 정책·사업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ODA 예산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국익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Ⅱ-2-일반재정④)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306)			28.70	29.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ODA 유·무상 종합 전략 수립 실적(건)	5 / 3	6 / 6	7 / 7	7	전년도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연례적 수립 안건 및 기본계획 관련 세부 안건(시행계획, 자원 배분계획 등) 제외	유·무상 종합 전략·정책 등 수립 실적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상정 안건 및 정책 결과물 등
ODA 사업 연계·조정 실적(건)	160 / 152	158 / 156	163 / 160	164	최근 패키지사업 발굴 및 사업 간 연계·조정 실적의 추세를 감안 하여 상향 설정	사업간 연계 조 정 및 패키지사 업 등 발굴 실 적	종합시행계획 및 부처 협의 결과 자료 등

< ODA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

□ 추진배경

- ODA 규모의 지속 증가('22년 3.94조원→'23년 4.78조원→'24년 6.26조원)로 ODA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및 시민사회 등과의 민관협력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별종합진단으로 수원국 관점에서의 한국 ODA 평가 추진
▲기관 역량진단·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의 사업 성과관리 역량 제고
▲자체평가 강화 및 메타평가 실시를 통한 평가 내실화 추진
- ▲관계기관 ODA 통합홍보 TF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도 제고
▲순주기 사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ODA 통합정보포털 개편
- 시민사회, 기업, 학계, 지자체, 해외공관, 수원국 등 ODA 유관 국가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24.2월	
	ODA 성과관리 강화방안	'24.2월	
	ODA 자체평가 후속조치 이행점검	'24.2월	
	'23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보고	'24.2월	
	'24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수립	'24.2월	
	ODA 통합홍보 TF 개최	'24.3월	
2/4분기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24.4월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점검	'24.6월	
	ODA 통합홍보 TF 개최	'24.6월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개최	'24.6월	
3/4분기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24.8월	
	ODA 자체평가 후속조치 이행점검	'24.8월	
	ODA 통합포털 마스터플랜(ISMP) 수립	'24.8월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24.9월	
	ODA 통합홍보 TF 개최	'24.9월	
4/4분기	'24년도 기관역량진단 및 메타평가 결과 도출	'24.10월	
	'24년도 시행기관 역량강화 컨설팅 완료	'24.11월	
	개발협력주간 행사 개최	'24.11월	
	ODA 시행기관 평가 교육 완료	'24.11월	
	ODA 자체평가 평가성사정 실시	'24.11월	
	ODA 위원회평가 후속조치 이행점검	'24.12월	
	ODA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확산	'24.11월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개최	'24.12월	
	ODA 통합홍보 TF 개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개발도상국 국민, 해외진출 기업 및 NGO 등
- ▲(이해관계집단) 관계부처, 공공기관(수은·KOICA 등), 민간전문가(학회) 등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간담회	ODA 민간 참여 활성화 위한 기업 간담회	2,3월
간담회	ODA 혁신방안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2,4월
회의	ODA 사업 집행·사후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3월
회의	ODA 홍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통합홍보 TF 회의 개최	3,6,9,12월
회의	ODA 시행 현장의 애로 발굴을 위해 지자체 협의회 회의	4,9월
현장방문	현장 애로 발굴을 위한 수원국 정부 및 현지 진출 기관 등 방문	4~11월
회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6,12월
포럼	정부-시민사회 ODA 합동 포럼 개최	11월

□ 기대효과

- 실효적 평가·환류 체계 구축·운영 및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
- 시민사회·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강화하고, ODA 책무성·투명성 증진
- 통합적·효과적 홍보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Ⅱ-2-일반재정④)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28.70	29.7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3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평가결과 환류 조치 과제(Feedback) 이행률	53.2 %	84.7 %	81.1 %	82 %	최근 3년간 자체평가 이행 점검결과 이행률 평균이 73%*인 점을 참고, 모수에 자체평가+위원회평가 환류 조치 과제까지 포함하여 최근 3년 간의 평균이행률로 목표 설정 * 전년 실적('21~'23년 평균이행률) 대비 약 10% 상향 설정 * '21~'23년(최근3년간) 이행률(평균) 73% ※ 21년 점검 대상 과제의 경우 코로나 19로 다수 이행 지연 발생	당해연도 이행 완료 건수/자체·위원회 평가 환류조치 필요 과제 건수 * 100%	자체평가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평가 이행점검 결과, 평가전문위원회 회의안건 등
ODA 유관기관 아웃 리치 성과 (건수)	신 규	신 규	11	12	시민사회·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개발협력주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 운영성과 * '23년 실적 대비 약 10% 상향 설정	시민사회, 기업, 학계, 지자체, 해 외 공 관 , 수 원 국 등과의 회의 개최 건수	시민사회, 기업, 학계, 지자체, 해외공관, 수원국 등과의 회의 개최 계획 등
통합 홍보 조정 성과 (건수)	신 규	신 규	9	10	통합홍보 TF 등을 통해 조율되어 실제 통합홍보를 위해 실현된 산출물 (전략 또는 홍보사례) 9건 목표 * '23년 실적 대비 약 10% 상향 설정	통합홍보 산출물 (보도자료, 홍보 영상, 홈페이지 개편 등)	회의결과, 보도자료,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1) 주요 내용

□ 위원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조정 지원

- 본격적 이행성과 창출과 국민 실질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가 기본계획('23.4월 수립) 이행점검 및 환류 추진
 - * 온실가스 감축, 전환·산업·녹색성장, 기후적응·공정전환, 국제협력·국민소통 등
- COP28 합의*, CFE 활성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반영, '2035 NDC'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
 - *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에너지효율 2배 확대 ▲ 원전 3배 확대 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탄소중립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	4.63	4.76	4.85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약 2% 상향을 목표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7점 척도)	*17,000 여명의 일반국민,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매년 12월 경

* 연도별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은 장시간(약 2년) 소요

→ '24년말 측정 가능한 현장전문가·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美 IRA 등 탈탄소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
- (갈등요인)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지역·산업·노동계의 반발, 환경단체의 목표 강화 요청, 일반 국민의 오해 등 예상
 - ☞ 지역 권역별 포럼 개최, 탄소중립 피해예상 업종 의견수렴 및 지원대책 마련,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 추진

(4) 기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운영 중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범부처 탄소중립 정책 수립·조정 및 국민 소통 지원 >

□ 추진배경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및 2030 NDC 수립 이후, 본격적 이행성과 창출과 실질적 체감도 제고에 필요
-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우려 증대로 국민적 이해와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적 소통·홍보 시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조정 지원
 -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피해업종 지원대책 마련, 넷제로 얼라이언스 추진 등
- 계기별·부문별 홍보전략 수립·시행 및 홍보·소통 플랫폼 적극 운영
 -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 전문가 컨퍼런스, 넷제로 프렌즈 구성·운영('24.4월~) 등 대국민 캠페인 전개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23.1~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	'23.3월	
	위원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조정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작성 추진 방안 등)	'23.1~3월	
	홈페이지·SNS 운영(계속)	'23.1~3월	
2/4분기	탄소중립 대국민 캠페인 전개	'24.4월	
	광역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	'24.4월	
	위원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조정 지원 (영농형태양광 도입전략, 2035 무공해차 전환, '24년 이행 점검 계획 수립,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24.4~6월	
	홈페이지·SNS 운영(계속)	'24.4~6월	
3/4분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	'24.10월	
	위원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조정 지원 (국제항공 탈탄소 추진전략, 2035 NDC 수립 계획 마련 등)	'24.7~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소통·홍보 추진	'24.7~9월	
	홈페이지·SNS 운영(계속)	'24.7~9월	
4/4분기	위원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조정 지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피해업종 지원대책 마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등)	'24.12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소통·홍보 추진	'24.10~12월	
	홈페이지·SNS 운영(계속)	'24.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탄소多배출 산업, 노동계, 지역, 미래세대 등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탄소多배출 산업·노동계	피해 예상 업종 의견수렴 간담회 산·학·관 협의회 구성·운영(넷제로 얼라이언스)	상반기
지역	중앙-지방 탄독위원장 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 개최	2~4월 하반기
미래세대	미래세대와의 간담회 개최, 넷제로프렌즈 모집·운영	상반기
전문가 집단	무탄소에너지 세미나, 기후적응 전문가 세미나, 전문가 컨퍼런스 등	연중

□ 기대효과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범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 시급성,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인식 전환과 실천 동참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①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319)	일반회계	57.24	51.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현안 조정 실적 (건수)	신규 26건	47건	50		- 전년 목표 대비 30% 상향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평균 주 1회(年 48주) 정책조정 실시, 내용면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	위원회, 부처 조정 회의 등 정책현안 조정 회의 상정 안건 건수	위원회, 및 회의 계획안 (공개안건인 경우 안건 또는 결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소통홍보 실적(건수)	신규 57건	81건	84		- 정책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플랫폼 게시 (72건) : 주 1.5회 이상의 자체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게시 - 간담회, 해외 주요 인사 면담 등 현장 소통 (12건) : 월평균 1회	정책홍보물 제작 및 게시, 현장소통 등 추진 건수	관련 게시물 리스트 (제작 및 배포 홍보물 등)

(1) 주요 내용

□ (특별자치)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원

- (제주) 제주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 이양 및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및 분권 모델 제주를 완성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도개선(제8차,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주민투표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24.1.30.)

- 교육, 관광, 의료 및 첨단산업 등 핵심사업과 제주 미래가치 기반의 신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세종)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 및 미래전략도시로 육성

-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특별자치시 기능보강을 위한 특례 발굴 및 「세종시법」 개정 등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광역교통망 확충 등 충청권 광역협력, 정주환경 개선, 기업·대학 유치 등 자족 기능 확충을 통해 세종 및 충청권 공동 발전 추진

- (강원) 「강원특별법」 시행('24.6.8.)과 동시에 미비점 보완 및 비전 구현*을 위한 필수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 법안 발의 지원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①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②강원랜드 규제 완화 ③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④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 강원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전에 비전 구현을 위한 특례 중심으로 소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

- (전북) 전북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지원
 -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 전북도의 자치권 강화·지역특화산업 육성·농어촌 개발 등 주요 핵심 분야 제도개선 지원
 - 전북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전북도의 발전 및 지방분권,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새만금사업 중요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지원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수 부처·기관·지자체 주요 정책*의 조율 및 이해관계 조정 지원

* 새만금 빅피처 마련(기본계획 재수립, SOC적정성 검토), 환경관리 대책 마련 등

- 새만금 산단 핵심 인프라 구축, 산업용지 추가·확대 등 기업 투자 수요* 급증에 선제적 대응, 다수 부처 협의 및 지속적인 이견 조정

* 현정부 출범('22.5월~'23.12월) 후 42건, 약 10.1조원 투자유치 성과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관련 국정과제 (38·111번) 만족도 평균(점)	신규	4.26	4.41	4.45	작년 실적(4.41) 대비 0.4점 높게 설정	2개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조사 결과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특별자치) 지역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조정 필요

-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포괄적 권한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지원 필요

- 관계부처와 제주도 간 입장 차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조정
 - 국제자유도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중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중단 및 사업 지연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야기
- ⇒ 이해당사자 간 이견조정 및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 모색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 적극 지원
- (세종) 세종시 관련 사업추진 기관 간, 인근 지자체 간 갈등관리
- 세종시 기반 조성, 충청권 균형·상생발전 추진,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 추진내용·방식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
- * 행복청, 국토부, 세종시, 충북·충남·대전시, LH 등
- ⇒ 세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관계기관(행복청, 세종시, 인근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이견 조정
- (강원)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이양, 특례 부여 및 규제 완화 과정상 관계부처와 의견충돌에 대해 긴밀한 협조와 지원 필요
- 관계부처와 강원도 간 입장 차가 큰 교육·환경 분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조정
- ⇒ 법안 마련 및 국회 상임위 심사 시 강원도 의견(핵심 특례)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의·조정 지원
- (전북) 국조실-전북도-관계부처 간 법령 개정, 제도개선 관련 협의·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 전북도 발전 종합계획 등 특별자치도 핵심과제 추진 관련 국조실-전북도 간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 특례 추가발굴, 제도개선 관련 전북도-관계부처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소통 확대 필요
- ⇒ 전북지원위원회 개최, 관계기관 간 수시 협조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

□ 새만금사업 중요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지원

- 새만금 사업은 다부처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으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요인 상존
 - ⇒ 국조실 주관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갈등 점점으로 정책 조정·지원
- 지역사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새만금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 제기
 - ⇒ 환경오염 관리는 중앙 부처·지역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입장을 국조실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조율 필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사·도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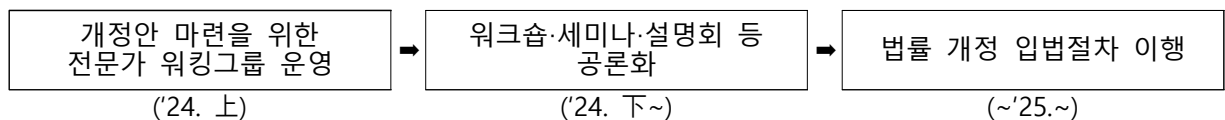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제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및 중앙행정 권한의 포괄적 이양, 국가 개방 거점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
- (세종)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추진
- (강원) 「강원특별법」 시행('24.6.8.)과 동시에 미비점 보완 및 비전 구현을 위한 필수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 법안 발의 지원
- (전북) 전북도의 핵심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5대 과제(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행복 증진, 기반 구축, 자치분권 강화) 추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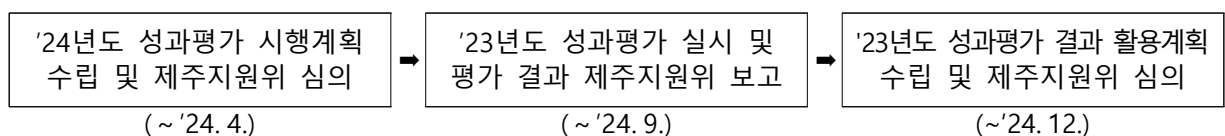
- (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구체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일정 》



- 제도개선 효과와 연계하여 '23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계획 수립(~'24.12.), '2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24.1.~4.)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 일정 》



- 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현황 주기적 점검 및 현안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지원 강화(분기별)
 - 제2첨단산업단지 착공,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착공, 헬스케어타운 및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지원 등
- (세종)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 및 미래전략도시로 육성
 -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을 위한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광역교통망 확충,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광역도시 계획 점검 관리 등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지원
 - 공동·복합캠퍼스 등 캠퍼스 타운 조성, 기업유치 및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미래도시 조성
 -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술도시 건설
 - ※ 어린이박물관('23.12. 개관) 운영 본격화, 체육시설 확충, 2027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경기 개최 지원 및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추진
 - 미래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 및 교육기관 건립 추진, 학교 신설 및 통학로 안전 확보 추진
 - ※ 교육발전특구 추진, 과학문화센터·평생교육원 건립 추진, 3개교(유2, 초1) 신설 및 개교 대비 통학환경 조성·점검 등
 - '23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표 개선 및 특정진단부문 선정 (경제분야) 등 '24년 성과평가 추진 및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 균형·상생 발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발굴·심의 등 세종지원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운영 내실화
- (강원)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 누락된 사항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에 대해 적극 지원
 - (법안 지원)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충실한 협의·조정으로 법안 발의 시 이견 발생 최소화
 - ※ (병행) 발굴된 특례에 대해 관계기관(국조실·행안부·강원도) 협의체 운영

- (평가계획 및 협약)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성과를 점검하여 법적·행정적 미비점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평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전북) 전부 개정된 「전북특별법」(’23.12.26. 공포, ’24.12.27. 시행)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관련제도 정비 등 추진

- (시행령 제정) 「전북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한 법령 내용 구체화, 관계부처 간 조정을 거쳐 연내 제정

* 특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특례 연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 (성과평가) 전북도 발전 종합계획, 국정과제 등과 연계된 성과 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협약(안) 작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전북도 간 성과협약 체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주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24.3월	제주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교육, 관광, 의료, 첨단 등) 현안 점검	’24.3월	
	’24년 3월 개교학교 교육환경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24.2월	세종
	세종정책포럼 개최	’24.3월	
	강원자치도가 발굴한 특례에 대한 현장점검	’24.1월	강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관계부처·도 간 협의·조정회의	’24.3월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립	’24.3월	전북
	국무조정실-전북자치도 정책현장방문 워크숍 개최	’24.3월	
2/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2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24.4월	제주
	제51차 제주도지원위원회 개최	’24.4월	
	제주특별자치도 ’23년도 성과평가 실시(외부 용역)	’24.6월	
	제주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24.6월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교육, 관광, 의료, 첨단 등) 현안 점검	’24.6월	
	강정마을 민관군 상생협의회 지원	’24.6월	
	세종시 정주환경개선 합동점검회의(1차)	’24.4월	세종
	세종시 ’2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24.4월	
	제27차 세종지원위원회 개최	’24.4월	
	’24년 투자유치협의회 개최(1차)	’24.5월	
	세종정책포럼 개최	’24.6월	
	강원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4.6월	강원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최종조정안 작성	’24.6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안) 검토	’24.6월	전북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23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24.9월	제주
	제52차 제주도지원위원회 개최	'24.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24.9월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교육, 관광, 의료, 첨단 등) 현안 점검	'24.9월	
	세종시 '24년도 성과평가 실시	'24.8월	세종
	세종시 정주환경개선 합동점검회의(2차)	'24.9월	
	세종정책포럼 개최	'24.9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수립	'24.9월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계획 및 협약(안) 최종안 작성	'24.9월	전북
	전북지원위원회 개최, 성과평가 협약안 의결	'24.9월	
4/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23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수립	'24.12월	제주
	제53차 제주도지원위원회 개최	'24.12월	
	제주영어교육도시 관계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24.12월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교육, 관광, 의료, 첨단 등) 현안 점검	'24.12월	
	강정마을 민관군 상생협의회 지원	'24.12월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지원	'24.12월	
	'24년 투자유치협의회 개최(2차)	'24.10월	세종
	세종시 정주환경개선 합동점검회의(3차)	'24.11월	
	세종시 '24년도 성과평가 결과 세종지원위원회 보고	'24.12월	
	제28차 세종지원위원회 개최	'24.12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	'24.12월	강원
	제3차 강원도지원위원회 개최	'24.12월	
	평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24.12월	
	국무총리-전북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체결	'24.10월	전북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주) 중앙행정 권한의 이양, 규제 완화가 제주의 발전·성장에 기여하는 성과평가에 대해 제주지원위원회 전문가 심의·보고(3회)
 -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조정 및 협의체 운영하여 긴밀한 협조 지원(분기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따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상생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군 정례 협의 지속 참여(2회)
- (세종) 세종시 교통·교육·문화·주거 등 전반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정주환경개선 합동점검회의) 운영

- 공동·복합 캠퍼스 조성지원,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기업 유치 추진상황 관리 등 의견수렴 및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투자유치 협의회) 운영
- (강원) 「강원특별법」 특례별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및 지원을 위한 '강원특자도 제도개선 발굴 추진단' 운영
- (전북) 전북도 발전 종합계획 등 현안 심의, 전북도 성과평가 협약(안) 의결을 위한 지원위원회 개최
- 전북도 발전 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내용의 적합성 등 점검과 개선방안 검토, 그 밖에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북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원방안 논의
- 「전북특별법」에 따른 성과평가 협약(안) 심의 및 의결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제주	제주지원위원회	제주 성과평가 계획 수립,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마련	4~12월
	현장방문, 간담회	영어교육도시, 국제자유도시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1~12월
	민관군 상생협의회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화합상생 정기회의	1~12월
세종	협업체 회의	정주환경개선 합동점검회의	4, 9, 11월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5, 10월
강원	현장방문, 워크숍	발굴된 특례별 현장 애로사항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지자체 방문, 워크숍 개최	분기
전북	전북지원위원회	발전계획 등 현안 심의, 성과평가 협약(안) 의결	9월

□ 기대효과

- (제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도민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 교육·관광·의료·첨단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세종)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현을 위한 필수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 제시
- (전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의 구체화, 자치분권 강화 실현을 위한 전북도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①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일반회계	3.74	4.81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320)	일반회계	3.74	4.8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특례 관련 조정·지원 건수(건)	-	-	-	20건	특별자치시·도 특례 관련 관계기관 등과 조정·지원한 실적	특별자치시·도 특례 관련 조정·지원 건수 (실적/목표)×50%	각종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계획, 결과 보고 등 증빙자료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 관련 조정·지원 건수(건)	-	-	-	36건	특별자치시·도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 관련 관계기관 등과 조정·지 원한 실적	특별자치시·도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 관련 조정·지원 건수 (실적/목표)×40%	각종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계획, 결과 보고, 지역 현안 관련 보고서 등 증빙자료
지자체, 관계기관 등 소통 실적(회)	-	-	-	20회	이건 조정,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및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 및 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지원위원회, 간담회, 워크숍, 현장방문 회의 등 소통실적 (실적/목표)×10%	지원위원회 및 각종 간담회, 워크숍, 현장방문, 회의 등 개최 계획,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지원 >

□ 추진배경

-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기관·지자체·민간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체간 협업·소통, 정책 통합 조정·지원 및 이해관계 조율 등이 매우 중요
- 국조실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조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새만금 빅피쳐 마련 등 시급한 현안 추진 및 조정

-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중, '24년 초안 마련 후 관계부처 의견 조정을 거쳐 '25년말 확정 예정
-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국조실 주도적 역할 필수
- (SOC 적정성 검토 대응) '24.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추진 중, 개별사업 일정 6~10개월여 지연 예상
- 국조실 주도로 개별사업 신속한 재개를 위한 기관간 업무 조율

②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기업 지원체계 구축) 새만금 투자유치 폭발적 증가*로 다수 부처·기관별 인프라 구축, 기업 애로사항 신속지원

* 현정부 출범('22.5월~'23.12월) 후 42건, 약 10.1조원 투자 유치

- (산업용지 추가·확대 공급) 기존 국가산단 대부분 소진, 용지별 용도변경 등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 다수 부처 협의 및 지속적인 이견 조정

③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종합평가 대책 마련

- 국조실 새만금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성과 종합평가하여 추가대책 마련 예정('24년)

④ 새만금사업 중요정책의 통합 조정·지원

-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 구체화, 식량 콤비나트 조성,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새만금 관광활성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하이퍼 튜브 구축 등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새만금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상반기 안건 수요조사	'24.1~3월	
	새만금 사업 관련 현안별 협의·조정 등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 개최		
2/4분기	민간위원 간담회 및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등) 개최	'24.4~6월	
	새만금 현안별 추진상황 점검(기반시설, 수질, 재생에너지 등)		
3/4분기	새만금위원회 하반기 안건 수요조사	'24.7~9월	
	민간위원 간담회 및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등) 개최		
	새만금 사업 관련 현안별 협의·조정 등		
4/4분기	민간위원 간담회 및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등) 개최	'24.10~12월	
	새만금 사업 관련 현안별 협의·조정 등		
	새만금 현안별 추진상황 점검(기반시설, 수질, 재생에너지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새만금사업의 지연·장애 우려가 있는 사업 모니터링, 현장의견 수렴 등 조정 역할 수행
- 입주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하여 정책에 신속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기관·기업 등 애로·건의사항 청취	분기별
현장방문	새만금사업 지연·장애요인 발굴·개선	매월
회의	새만금사업 현안별 협의·조정 회의 개최	분기별

□ 기대효과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정책의 통합 조정·지원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조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새만금위원회 운영 활성화(I -1-일반재정④)				
①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7035)		일반회계	1.63	1.59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314)		일반회계	1.63	1.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새만금위원회 운영 실적(회)	6/6	6/6	8/6	6	새만금위원회(분과위원회) 개최	(이행실적/목표치) ×0.3	위원회 회의결과, 간담회 결과 등
	7/7	7/7	7/7	7	민간위원간담회 개최	(이행실적/목표치) ×0.1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실적(회) 및 정책 조정 반영실적(건)	20/20	22/21	23/21	21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실적(회)	(이행실적/목표치) ×0.1	위원회 회의결과, 공문 결과보고, 관계기관 회의자료 등
	10/10	11/11	11/11	11	정책 조정·반영 실적(건)	(이행실적/목표치) ×0.2	
새만금 사업 개발율 (%)	47.2/47.0	48.0/48.0	48.5/49.0	49.3	새만금기본계획상 2단계(~2030년) 단계별 개발목표에 따른 새만금 산업용지 공사 추진을 목표치로 설정	(이행실적/목표치) ×0.3	위원회 회의결과, 공문 결과보고, 관계기관 회의자료 등

1. 금년도 협업과제

- ◇ 부서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 '협업과제' 부문 신설
-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총 10개)를 선정

《협업과제 총괄현황》

	협업과제명	협업 대상부서	
		주관	협조
1	국정과제 성과 홍보 강화	국정과제	평가총괄, 성과관리
2	민간 주도 규제혁신 추진 기반 공고화	규제총괄, 혁신추진단	규제혁신, 규제심사
3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산업과학	농림국토
4	불법사금융 척결	재정금융	일반행정
5	심판부간 대량병합사건 공동수행	조세심판원 각 심판부	
6	외국인력 통합관리	고용식약	일반행정
7	의료개혁	사회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 고용식약
8	유보통합	교육문화	사회복지
9	청년정책 조정·지원 및 소통·참여를 통한 청년의 삶 개선	청년기획, 청년협력	
10	개발협력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운영	ODA기획	ODA지원

(1) 국정과제 성과 홍보 강화

□ 과제 목표

-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 주요 민생 정책 제도의 지속·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인지도·활용도 및 정책 효과성 향상

□ 주요 내용

- 정부 출범 2년 계기 실적자료집·성과홍보집 제작 및 배포(5월)
 - 자료집 제작과 함께 성과 홍보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 검토
- 국정과제점검회의(연말)을 통해 주요 성과 소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평가실 소실)

- (성과자료집) 원고 작성·검토 및 부처 협조 관련 평가실 소 국 협업
 - (평가총괄국) 기재부·산업부·공정위·금융위 등 경제부처 중심 협업
 - (국정과제국) 외교부·법무부 등 외교안보·일반행정 부처 중심 협업
 - (성과관리국) 교육부·고용부·문체부·복지부 등 사회부처 중심 협업
-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 준비 주요 분야별로 국 단위 역할 분담

□ 추진계획

- 성과자료집·핵심성과집 제작·배포(5월), 국정과제점검회의 개최(연말)

(2) 민간 주도 규제혁신 추진 기반 공고화

□ 과제 목표

- 다수 부처·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복잡하고 국민·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과제 해결을 위해 민간주도 규제혁신제도 적극 활용
 - 既 구축된 규제심판제도 및 규제혁신추진단 회의를 활용하여, 부처 불수용 과제 및 다수 부처 연계 과제 해결을 도모

□ 주요 내용

- 각국의 소관 업무 과정에서 접수·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심판제도(규제총괄국) 또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규제혁신추진단)에 안건으로 상정
 - 규제심판부 또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재검토·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추진 기반 공고화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주관 부서*) 타 부서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 과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과제선정 여부를 판단한 후, 안건 상정 추진

* 규제심판제도: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추진단 회의: 규제혁신추진단

- (협조 부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자료 제공 및 부처 협의 등 적극 협조

□ 추진계획

- 국간 상시 소통을 강화하여 민간 주도 규제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규제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연중 상시)

※ 참고 : 실행 사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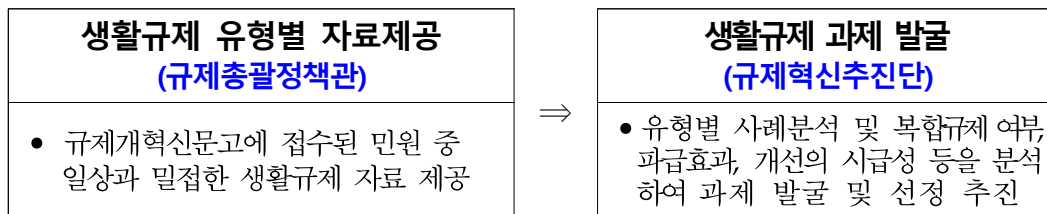
- 규제개혁신문고(총괄국)에 접수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민원* 관련, 개선이 시급하고 복합적인 규제를 추출, 덩어리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추진단)

※ 처리결과 미해결 사안(중장기 과제, 수용곤란 과제)을 대상으로 추출, 선정된 과제는 추진단에서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현황 >

년도	접수(건)	분류(건)			
		기업	자영업자	국민생활	기타
2023년(5월까지)	830	184(22.2%)	114(13.7%)	420(50.6%)	112(13.5%)
2022년	1,880	377(20.1%)	150(7.9%)	1,186(63.1%)	167(8.9%)
합계	2,710	561(20.7%)	264(9.7%)	1,606(59.3%)	279(12.9%)

※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 중 약 60%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규제에 해당(소형 건축물 규제, 농촌 시설물 규제, GB규제 등)



(3)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 과제 목표

- 반도체·미래모빌리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신규 국가산업 후보지*의 신속 조성 통해 국가 경제 발전 견인

* 15개소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경기 용인,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충남 천안·홍성, 전북 익산·완주, 전남 고흥, 경북 경주·안동·울진, 경남 창원, 대구 달성, 광주 광산, 대전 유성

□ 주요 내용

- 첨단산업은 속도가 핵심으로,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단축, 보상협의 등 신속한 조성 추진 지원
- 세제혜택, R&D 지원, 인재 양성 등 정부 지원정책을 집중하고,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및 정주여건 조성 필요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농림국토) 단지계획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협의,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공급, 교통개선 대책, 주거 등 배후단지 조성 등 관리 철저
- (산업과학) 첨단전략산업위(위원장: 총리) 중심 산업 전반의 육성책 마련, 첨단산업 특화단지(용인 등) 지원제도를 활용한 산업 조성 지원 추진

□ 추진계획

- 이해관계 조정 및 지원방안 협의, 절차 단축 등 속도감있게 추진

(4) 불법사금융 척결

□ 과제 목표

-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및 피해자 구제

* 최고금리(20%) 초과 고금리 대부 및 미등록자의 불법 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 주요 내용

- 「불법사금융 척결 TF*」 운영을 통해 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불법사금융 쏙 단계에 걸친 대응 노력 지속

* 국조실(주재),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22.8월 구성, 총 6회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확대 운영(~'24.6월)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범죄수익 철저히 과세·징수
- 불법사금융 처벌강화를 위한 구속·구형기준 재검토 및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 등 피해자구제 강화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재정금융정책관) ①수사·단속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불법사금융 공급근절, ②정책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통한 수요완화
- (일반행정정책관) 보이스피싱 TF 중심 민생침해 범죄 관련 대국민 홍보 추진(정부사칭 대부광고 주의문자 발송 등), 취약계층 경각심 제고

□ 추진계획

- 「불법사금융 척결 TF」 개최(분기별 1회)

(5) 심판부간 대량병합사건 공동수행

□ 과제 목표

- 동일쟁점으로 제기된 대량병합사건에 대하여 다수 심판부가 협업으로 공동수행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신속성 제고
- 대량병합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다수 심판부를 통하여 사건 처리 과정 및 심판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 주요 내용

- 대량병합사건 심판부간 배정 및 공동수행
 - 종합부동산세 대량병합사건과 같이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병합된 대량청구사건을 대상으로 보유사건 수, 인력 등 심판부 사정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정
 - 청구인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심판부간 처리과정 공유·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교환 및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심판기일 상호 조정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각 심판부는 대량병합사건 공동수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진행상황 공유, 심판기일 상호조정, 주요쟁점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추진계획

- 연내 100건 이상 사건이 병합제기된 대량병합사건을 심판부간 협업으로 총 500건 이상 처리할 계획

(6) 의료개혁

☐ 과제 목표

- 생명과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현안 해결

☐ 주요 내용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24.2월)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본부장 : 총리)를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사회복지) 중대본 운영 및 부처별 역할분담·조정, 비상진료대책 및 집단행동 대응,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점검(복지부) 등 관리 총괄
- (교육문화)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의대 정원 배정(교육부), 언론 및 홍보 대응(문체부) 등 지원
- (안전환경) 119구급차량 응급환자 이송(소방청) 등 지원
- (고용식약) 산재병원 비상진료체계 운영(고용부) 등 지원

☐ 추진계획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2.23~) 및 현장행보 등 실시

(7) 유보통합

□ 과제 목표

-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 실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 목표

□ 주요 내용

- 現 정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 선정*하여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23.1),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 (46번)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보육과 교육의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복지부)
 - (84번)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교육부)
-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기관간 격차 해소, 정부조직법 개정('24.6 시행)으로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재원 이관 및 통합 등 추진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교육문화) 조직 및 재원 이관, 관련 법률 일괄 재개정 등 관리체계 일원화 및 모델학교 등 시범사업,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 등 통합모델 현장적용 등 추진 지원
- (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24.6월 시행)에 따라 중앙단위 업무 이관(복지부 → 교육부) 등 후속조치 이행 지원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을 복지부 →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

□ 추진계획

- 모델학교 등 시범사업 실시('24.상), 통합모델 시안 발표('24.상)
- 지방 단위 유보통합 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법 개정 추진('24.하)

(8) 외국인력 통합관리

□ 과제 목표

- 외국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주요 내용

- 부처별 외국인력의 관리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통합 개선방안 마련
 - 부처별 분절적 관리 등으로 인한 비효율, 현행 외국인력 정책 운용의 문제점 발굴·개선하여 중장기 외국인력 정책 추진방안 마련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및 개선방안 수립
 - 외국인력 통합관리 TF,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력 관련 현안 조정, 외국인력 정책추진 방안 등 마련

* 기재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등 참여

- (일반행정정책관) 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관련한 외국인력 현안 조정, 외국인 정책 관련 방안 수립 등에 협조

□ 추진계획

- (협의체 운영) 외국인력 통합관리 TF(~'24.上),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연중)
- (정책방안) 외국인력 현안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24.上)

(9) 청년정책 조정·지원 및 소통·참여를 통한 청년의 삶 개선

□ 과제 목표

- 부서간 및 유관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홍보로 정책 체감도 강화

□ 주요 내용

- 국 간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의견 반영
 - 청년정책기획관의 정책기획력과 청년정책협력관의 청년과의 소통력간 시너지를 통해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적극 반영
 - 아울러 청년정책기획관 및 청년정책협력관에 배치된 청년인턴을 적극 활용해 제반 청년정책 업무에 청년의 인식 반영
- 국 간 협업 및 9개 부처 전담조직과 협업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국조실 주도로 발표한 청년 대책 및 부처별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국간 협업을 통해 청년의 날 등 계기별 적극 홍보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협력국) 청년참여 공론장 등을 활용, 정책수요자인 청년과 적극 소통하고, 청년정책 수립시 청년의 의견이 환류될 수 있도록 기획관과 상시 공유
- (기획국) 청년인턴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청년 종합대책,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사항 발굴 지원, 청년참여 행사 지원 등

□ 추진계획

- 청년정책 총괄·조정 지원(분기별)
- 청년정책 소통·홍보 지원(분기별)

(10) 개발협력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운영

□ 과제 목표

- 범부처 합동 기념행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 및 ODA 사업 참여자 자긍심 고취

□ 주요 내용

- (기념식) 개발협력의 날(11.25) 기념, 총리 주재 기념행사 개최
 -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 (국민참여행사) 시행기관 및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홍보행사 합동 진행
 - 광화문광장 홍보부스(11.2~11.6), ODA사진전(11월중, 서울역 등) 등
- (개발협력주간) 기념주간(11.25~11.29) 중 관계기관 세미나, 포럼 등을 집중 개최하여 ODA성과 이슈화 추진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개발협력기획국) 행사운영 총괄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추진계획 수립, 진행사항 총괄 관리
 - 행사용역 발주 및 계약, 부서 간 행사T/F 구성 운영 등
- (개발협력지원국) 개별 행사 운영 및 참여기관 모집 등
 - ODA사진전, 국민참여행사 등 개별행사 운영
 - 참가기관 모집, 홍보영상 제작, 행사 홍보 등

□ 추진계획

- 행사기획 T/F 운영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5월)
- 개발협력의 날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6월)
- 용역업체 선정(8월) 및 세부행사 기획·참가자 초청 등 행사 준비(9~10월)
-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및 개발협력주간 행사 운영(11월)

1. 이행상황 점검계획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전체위원회

- (내부위원) 국무조정실 국장급(4명)으로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2/3 이상으로 구성(총 17명 中 13명)

☐ 분과위원회

- 국무조정실의 핵심업무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분과위원회 (국정일반, 평가·규제, 경제, 사회) 설치 ※ 자체평가위원장은 제외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

- (역할) 평가계획, 중간 이행상황, 평가 결과 등 심의·의결
- (회의) 연말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전체위원회를 개최 (대면·서면)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개최 가능

☐ 분과위원회

- (역할) 전체위원회 안전상정 前 분과별 사전검토, 분과별로 자문·평가 필요사항 및 기타 전체회의 위임사항 심의·의결
- (회의) 분과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3)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자체평가) 방안

□ 기본원칙

-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으로 체계 운영
-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연중), 분과위원회별 실적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평가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심층적 평가
- 개인별 직무성과계약서 작성 등 자체평가 결과가 인사 및 성과급 등과 최대한 연계되도록 조치

□ 자체평가 방법

① 실적 제출 등 평가 준비

- 평가 前, 과제담당자가 1년간 실적을 평가지원총괄팀에 제출
- 평가지원총괄팀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등을 해당 분과별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부여(1주일 이상, 서면)

② 분과위원회 평가

- 분과별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소관 과제에 대해 추가질의 및 위원 간의 토론을 통해 평가점수를 확정

③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평가지원총괄팀은 평가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송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의 기회 부여
- 과제담당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에 제출

※ 과제담당자가 분과위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지양

④ 분과위원장단 조정회의 개최

- 부서별 이의신청 내용, 과제별 조직기여도,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과제에 등급 부여

⑤ 전체위원회 개최

-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자체평가 일정(안)

구 분	추진일정	비고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24.4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 상반기 이행상황 중간점검	'24.7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 '24년도 자체평가 실시	'24.11	-
- 자체평가 실적 작성·제출	'24.11	각 정책관실
- 분과위별 서면평가	'24.12	서면평가
- 실적보고회 및 분과위 평가	'25.1	분과위원회
- 과제별 지적사항 공유 및 이의신청	'25.1	각 정책관실
- 분과위 간 편차 조정	'25.1	분과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25.2	전체위원회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분야별 활용방안

분 야	활 용 내 용
정 책 개 선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은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에 지속 환류
인 사	○ 성과급과 연계 - 개인 성과급 지급 시 자체평가 결과 반영(부서평가 중 30%) ※ (참고) 개인 성과급 지급기준 ○ 직급별 반영비율*에 따라 부서평가와 개인기여도 점수를 합산 * (부서평가 : 개인기여도) : △3~4급(6 : 4) △4.5~5급(5 : 5) 등 ○ 부서평가* 중 자체평가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 * 부서평가 점수(100점) = 기관장 평가(60점) + 자체평가(30점) + 과단위 평가(10점) ○ 인사와의 연계 - 개인별 직무성과계약 평가와 연계*하여 자체평가 결과가 성과급 및 승진·전보 등 인사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 개인별 직무성과계약서 작성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소관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 및 국내·외 교육훈련 선발 시 심사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활용 확대
조 직	○ 조직관리 유공부서 포상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소관 부서에 포상·격려금 지급 * 우수과제 소관부서 : 1위(200만원), 2·3위(150만원), 4·5위(100만원)
공 유 및 확 산	○ 실적보고회,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위원 및 직원들의 평가과제 이해도 제고 및 평가결과 수용도 강화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우수과제 사례 공유·전파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6	5	0 (0%)	3 (60.0%)	0 (0%)	2 (40.0%)	3 (60.0%)
성과목표	22	22	0 (0%)	0 (0%)	4 (18.2%)	18 (81.8%)	9 (40.9%)
관리과제	29	70	1 (1.4%)	27 (38.6%)	32 (45.7%)	10 (14.3%)	69 (98.6%)

* 총괄현황 서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통계관리를 위해 통일 필요)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실적	주례회동,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 국정협의체 운영 횟수	249회	정량	과정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60점	정성	결과	
III.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규제혁신 종합만족도(점)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일반인,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만족도조사 결과 (6점 척도를 100점으로 변환)	76.5점	정성	결과	
IV.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조정 대응실적	주례회동,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총리-부총리 협의회 등 국정협의체 운영 횟수	134회	정량	과정	
V.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전략 I 과 통합)	주례회동,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총리-부총리 협의회, 관계장관회의, 리스크대응회의 등 국정협의체 운영 횟수	259회	정량	과정	
VI.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각 성과목표 지표	각 성과목표 지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측정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갈등완화율	갈등현안 과제수대비 갈등 완화·진전 과제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안건 기준)	61%	정량	결과	
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49점	정성	결과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자료	63	정량	결과	
Ⅱ.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국정과제(실천과제) 세부이행계획 정상추진율(%)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대비 연말 기준 정상추진율(=정상추진과제 수/전체 실천과제 수)	90.0	정량	결과	
2.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절성	성과관리 제도 운영 적절성 인식도 조사 결과	70%	정성	결과	
3.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정부 및 산·학·연 고객만족도	전체 평균점수 (27개기관 점수의 평균점)	90점	정량	결과	
Ⅲ.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1. 핵심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국민 만족도(점)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일반인(국민) 만족도조사 결과 (6점 척도를 100점으로 변환)	73.0점	정성	결과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정완료 건수(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개선 과제수	50건	정량	산출	
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개선	중요규제 개선(부대)·철회 권고율(%)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77	정량	산출	
4. 중복·복합규제(덩어리 규제)의 종합적 개선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건)	개선안이 마련·발표(공청회 등 포함)된 주요 덩어리 규제 수	18건	정량	산출	
Ⅳ.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조정·지원 강화	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60점	정성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조정·지원 강화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68점	정성	결과	
3. 농림·국토·해양 분야의 조정·지원 강화	농림국토해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71점	정성	결과	
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조세심판 사건처리비율(%)	총처리건수 / (이월건수 + 접수건수) × 100	75.0%	정량	산출	
V.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1. 보건·복지 분야 조정·지원 강화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93점	정성	결과	
2.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분야 조정·지원 강화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65점	정성	결과	
3. 안전·환경 분야 조정·지원 강화.	안전·환경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79점	정성	결과	
4.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조정·지원 강화	고용·식품안전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67점	정성	결과	
VI..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지원	청년정책 분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7점 척도)	4.50	정성	결과	
2.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ODA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100점 척도)	65	정성	결과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탄소중립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7점 척도)	4.85점	정량	결과	
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지원	관련 국정과제 (38·111번) 만족도 평균(점)	2개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4.45점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적극적 국정현안 조정 및 갈등관리							
1.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활성화							
	1. 국정현안 선제적 조정 및 적극적 갈등관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률	이행률(%) = (완료건 + 정상추진건)/전체	95%	정량	산출	
		국정상황점검 실적	국정홍보점검회의, 상황점검회의, 리스크 대응회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등 개최 실적	88건	정량	과정	
		갈등과제 점검회의 실적	리스크 점검회의 등 갈등관리 점검회의 실적	35건	정량	과정	
	2. 일반행정 분야 현안관리 및 선제적 조정·지원 강화	일반행정 현안 점검 및 정책 조정 실적	정책현안 조정· 지원점검 건수	32건	정량	과정	
		국무차관회의 상정 안건수	국무차관회의 상정 안건수	2,000건	정량	과정	
2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1. 외교·안보 현안 관리 및 국무총리 외교활동 보좌	외교·안보 분야 현안 관리	관계부처회의 횟수 + 정책조정 건수	19건	정량	과정	
		외교·안보 관련 긴급 사안 대응	1개의 사안에 대해 수차례 보고하더라도 1건으로 카운팅	12건	정량	과정	
		국무총리 현장 행보 및 외교활동	보훈 관련 행사 등 현장 + 순방, 접견, 서한 등 외교활동	52건	정량	결과	
	2.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활용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갈등관리	정책협의회 및 현안점검회의 처리안건 건수	정책협의회 및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처리한 안건수	39	정량	과정	
		한미간 쟁점현안 발굴 및 구체화	갈등현안 조정을 위한 한미협의 및 정책조정 횟수	2	정량	과정	
		현장 방문 및 소통 건수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간담회 개최 횟수	24	정량	과정	
		반환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부처·국회 협의 완료 건수	4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정부패 차단							
	1. 국민생활 밀접 및 국가재정손실 부정부패 예방	점검과제 건수	연간 점검과제 건수	8건	정량	산출	
		제도개선 과제 이행률	점검결과 발표 과제 중 연내 완료키로 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률	83%	정량	산출	
II.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							
1.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1. 국정과제 관리·점검	국정과제(실천과제) 세부이행계획 정상추진율(%)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대비 연말 기준 정상추진율(=정상추진과 제수/전체 실천과제 수)	90.0	정량	결과	
2 정부 성과관리의 체계적 운영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적 운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실적	성과관리 자체평가 부처 컨설팅 실시	총6회	정량	투입	
		성과관리·자체평가 역량지원 만족도	성과관리 컨설팅, 워크숍 등 참석자 만족도 조사 결과	70%	정성	결과	
3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							
	1. 출연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	융·복합 연구 성과	융·복합 연구를 통한 연구성과물 생산 실적 (+연구지원과 실적)	9건	정량 (+정성)	과정	
		긴급현안 발굴·대응	국민생활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연구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연구지원 (+연구지원과 실적)	18건	정량 (+정성)	과정	
		연구기관 운영실태 등 점검결과	(연구기관 운영실태 준수율+복리후생 점검결과)/2 ±소통	94점	정량 (+정성)	결과	
III. 민간의 창의·자유 발현을 위한 규제혁신							
1. 핵심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1. 규제혁신추진체계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 해소	규제혁신추진체계 운영실적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심판회의 개최 실적	24회	정량	과정	
		핵심규제 개선 성과	핵심규제 개선방안 안건 보고	26건	정량	산출	
		관계기관 협업 및 조율	이견과제 조정실적	24회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1. 규제샌드박스 성과창출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정완료 건수(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개선 과제수	50건	정량	산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수(건)	기업애로 발굴과제 규제혁신방안 발표 과제수	64건	정량	산출	
3. 규제 합리화 및 불합리한 규제의 선제적 차단·개선							
	1.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품질 제고	중요규제 개선(부대)·철회 권고율(%)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77	정량	산출	
		재검토기한도래 규제정비율(%)	(개선 또는 폐지된 규제 수/ 재검토기한도래 규제 수) ×100	25	정량	산출	
4. 덩어리 규제의 종합적 개선							
	1. 덩어리 규제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건)	개선안이 마련· 발표(공청회 등 포함)된 주요 덩어리 규제 수	18건	정량	산출	
		덩어리 규제 발굴 수 (건)	자체발굴 등을 통해 선정된 덩어리 규제 수	43건	정량	산출	
		야해관계자 전문가 소통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등 개최(건수회)	과제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횟수	560회	정량	산출	
Ⅳ. 역동적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조정·지원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조정·지원 강화							
	1. 재정·금융 정책 조정·지원 강화	거시경제·예산·재정· 금융·공정거래· 공공기관 정책조정 실적	국무총리 메시지, 관계부처 회의 등 정책현안 점검·조정 건수	53건	정량	과정	
		경제동향 점검·대응 실적	주요 경제지표· 정책이슈 분석·점검 건수	400건	정량	과정	
2. 산업·통상·에너지·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조정·지원 강화							
	1. 산업·과학기술·중기벤처 등 산업경쟁력 분야 정책 조정·지원 강화	산업체질 혁신·무역구조 고도화·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경쟁력 분야 정책조정·지원실적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50건	정량	과정	
		산업체질 혁신·무역구조 고도화·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경쟁력 분야현안 해결율	(정책현안 해결건수/정책현안 조정지원 수요)*100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농림·국토·해양 분야의 조정·지원 강화							
1. 농림·해양 및 국토·교통 정책 조정·지원 강화	농림·해양·국토·교통 정책 현안 조정·지원 실적	위원회, 부처 조정회의, 정책현안 조정·점검회의 상정건수	48건	정량	과정		
	농림·해양·국토·교통 정책 현안 해결율	(정책현안 해결건수/정책현안 조정지원수요) *100	100%	정량	산출		
4.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1.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180일내 사건처리 비율	(180일내 처리사건수 / 당해연도 처리사건수) × 100	57.3%	정량	산출		
	장기미결사건 비율	(장기미결사건수 / 해당 연도 이월건수) × 100	10.3%	정량	산출		
2. 청구인 참여확대를 통한 심판결정의 신뢰 제고	의견진술건수	해당 연도 의견진술 사건수	5,311건	정량	산출		
	국선대리인 사건 처리건수	해당 연도 국선대리인 사건 처리건수	26건	정량	산출		
V. 국민의 생명·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조정·지원							
1. 보건·복지 분야 조정·지원 강화							
1. 보건·복지정책 추진 지원 및 조정 강화	보건·복지분야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정책협의체를 통한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21건	정량	과정		
	보건·복지분야 정책소통 건수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건수	18건	정량	과정		
2. 교육·문화·체육·여성 분야 조정·지원 강화							
1.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 정책 관리 및 정책조정 강화	교육·문화·체육·관광· 여성분야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정책현안 조정 지원 건수	20	정량	산출		
	교육·문화·체육·관광· 여성분야 정책 소통 건수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건수	62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안전·환경 분야 조정·지원 강화							
	1. 안전·환경 정책 조정·지원 강화	안전·환경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정책현안 조정·지원 건수	60건	정량	과정	
		안전·환경 분야 정책 소통 건수	현장점검, 간담회 등 추진 건수	40회	정량	과정	
	2.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정책 조정·지원 강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관련 조정·지원 건수	미특위, 현장행보, 간담회 등 개최건수	15회	정량	과정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과제 이행률	(정상이행 과제 개수/과제 총 개수) * 100	91%	정량	산출	
4.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조정·지원 강화							
	1. 고용노동·식품의약 분야 정책 추진 지원 및 현안관리	고용·노동 정책현안 해결률	(고용·노동 정책현안 해결 건수 / 고용·노동 정책 현안 조정·지원 수요 건수) * 100	85%	정량	산출	
		식의약 정책현안 해결률(%)	(식품·의약 정책현안 해결 건수 /식품·의약 분야 현안 발생 건수)	85%	정량	산출	
		고용노동·식품의약 정책소통 건수(건)	현장행보, 간담회 등 추진 건수	12	정량	산출	
Ⅵ.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조정·지원							
	1.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청년정책 조정·지원 실적(건)	정책현안 조정 지원 건수	24건	정량	과정	
		청년 관련 현안 해결률(%)	(정책현안 대책 마련 건수/정책현안 조정·지원 수요 (요청) 건수) *100	95%	정량	산출	
	2. 청년정책 소통·홍보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청년DB 연간 등록 목표인원 달성률	(연간 등록인원 / 1.8만명) × 100%	80%	정량	산출	
		중앙정부 청년위원 위촉비율(%)	청년위원 위촉 수 /청년참여 정부위 위촉위원 수	2%	정량	산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안 개선과제(건수)	개선과제 제안 개수	120개	정량	산출	
		온라인 청년센터 고객만족도	온라인 청년센터 이용자 만족도	86.1%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를 위한 정책 조정·지원							
	1. ODA 통합 정책·전략 마련 및 사업효과성 제고	ODA 유·무상 종합 전략 수립 실적	유·무상 종합 전략·정책 수립 실적 ※ 연례적 수립 안건 제외	7	정량	산출	
		ODA 사업 연계·조정 실적	사업간 연계 조정 및 패키지사업 발굴 실적	164건	정량	결과	
	2. ODA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평가결과 환류조치 과제 이행률	이행완료 건수/환류조치 필요 건수	82%	정량	과정	
		ODA 유관기관 아웃리치 성과	시민사회, 기업, 학계, 지자체, 해외공관, 수원국 등과의 회의 개최 건수	12건	정량	결과	
		통합 홍보 조정 성과	통합 홍보 산출물	10건	정량	결과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체계적 추진							
	1. 범부처 탄소중립 정책 수립·조정 및 국민 소통 지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현안 조정 실적	위원회, 부처 조정 회의 등 정책현안 조정 회의 상정 안건 건수	50건	정량	산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소통·홍보 실적	정책홍보물 제작 및 게시, 현장소통 등 추진 건수	84건	정량	산출	
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지원							
	1.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원	특례 관련 조정·지원 건수(건)	특별자치시·도 특례 관련 조정·지원 건수	20건	정량	결과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 관련 조정·지원 건수(건)	특별자치시·도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 관련 조정·지원 건수	36건	정량	결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소통 실적(회)	지원위원회, 간담회, 워크숍, 현장방문 등 각종 소통실적	20회	정량	결과	
	2.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지원	새만금위원회 운영 실적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6회	정량	과정	
			민간위원간담회 개최	7회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실적 및 정책 조정·반영 실적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실적(횟수)	21회	정량	과정	
			정책 발굴·조정·반영 실적(건수)	11건			
		새만금사업 개발율	새만금 사업 개발율	49%	정량	산출	